

서부아프리카 합작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적지 및 조사분석

2014. 1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출 문

한국원양산업협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부아프리카 합작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적지 및 조사 분석」영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 성 귀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 책임자 : 마 창 모

연구진 : 홍 현 표, 장 홍 석, 한 덕 훈, 장 춘 봉
문 석 란, 이 지 은, 남 상 태, 권 세 일
오 남 록, 이 선 임, 배 규 영, 김 창 욱

자문위원 : 박 창 렬

연구감리 : 류 정 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제3절 연구 추진체계	5
제4절 주요 연구결과	5
제2장 서부아프리카 투자환경 분석	9
제1절 아프리카 발전 전망	9
제2절 서부아프리카 투자 환경 비교	11
1. 개요	11
2. 주요국의 투자환경 비교	12
3. 아프리카 진출지원 금융기관	17
제3절 서부아프리카 국가별 투자환경	19
1. 기니	19
2. 기니비사우	19
3. 시에라라온	20
4. 앙골라	21

제3장 서부아프리카 수산업 현황	25
제1절 일반 현황	25
1. 해역의 범위	25
2. 34해구 조업현황	25
제2절 조업 현황	27
1. 서부아프리카의 수산물 생산 현황	27
2. 서부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의 생산현황	28
제3절 교역 현황	33
1. 주요어종의 수출입 현황	33
2. 한국의 대 아프리카 수산물 수입 현황	35
제4절 진출 여건	36
1. CSRP 범위	36
2. 어업관련 규정	37
3. 어업관리	40
4. 어업규정 종합	46
제5절 EU의 진출 사례	49
1. 법적 제도적 근거	49
2. EU의 양자협정 현황	50
3. EU의 서부아프리카 진출	51
4. EU-기니 어업파트너십	52
제4장 대서양트롤 유지 존속 방안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기본 방향	72
제3절 추진 전략	73
1. 자원관리형 원양어업을 위한 감척사업 추진	73

2.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략	76
3. 중층트롤로의 업종 전환	83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91
부록	95
1. 2014 기니공화국 어업법	95

표 목차

〈표 2-1〉 아프리카의 GDP 규모 전망	9
〈표 3-1〉 시에라리온의 상업적 어선과 재래식어선의 수산물 생산량	30
〈표 3-2〉 기니 선박별 조업척수 및 생산량	31
〈표 3-3〉 기니 업종별 조업척수 및 생산량	31
〈표 3-4〉 기니 어장 진출 선단별·어구별 특징	32
〈표 3-5〉 모로코 어업관련 규정	38
〈표 3-6〉 모리타니아 어업관련 규정	39
〈표 3-7〉 세네갈 어업관련 규정	39
〈표 3-8〉 기니 어업관련 규정	40
〈표 3-9〉 CSRP 국가와 모로코의 해역에 관한 규정	40
〈표 3-10〉 소형 원양어종 접근 체계	41
〈표 3-11〉 모리타니아와 세네갈의 용선 조건 비교	42
〈표 3-12〉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해양보호구역 비교	43
〈표 3-13〉 서부아프리카 원양트롤의 망목 기준	44
〈표 3-14〉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허용된 영세어업자의 망목크기	44
〈표 3-15〉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어종별 체장 규정	45
〈표 3-16〉 북서아프리카 국가의 어업 수역 경계	46
〈표 3-17〉 서부아프리카 수산관련 법령(종합)	47
〈표 3-18〉 EU-아프리카 양자수산협력 현황	51
〈표 3-19〉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유럽 합작회사와 어선의 수(2000년)	52
〈표 4-1〉 서부아프리카트롤의 선박별 효율성 분석 결과	8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5
〈그림 2-1〉 1일 1.25달러 미만 인구 비중	10
〈그림 2-2〉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일반지표(2008년)	12
〈그림 2-3〉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2008년)	13
〈그림 2-4〉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창업지표(2009년)	14
〈그림 2-5〉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수출지표(2009년)	14
〈그림 2-6〉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소유권 등기 절차 및 시간(2009년)	15
〈그림 2-7〉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 지수(2009년)	15
〈그림 2-8〉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납세지수(2009년)	16
〈그림 2-9〉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분야별 투자환경 비교	17
〈그림 3-1〉 서부아프리카 34해구 구역도	26
〈그림 3-2〉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 조업국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	26
〈그림 3-3〉 서부아프리카 주요 조업국의 생산현황	27
〈그림 3-4〉 서부아프리카에서의 외국 조업선의 조업활동	28
〈그림 3-5〉 서부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의 수산물 생산현황	29
〈그림 3-6〉 시에라리온 톰보(Tombo)항과 재래식 카누선	30
〈그림 3-7〉 고등어의 국제적 수출입 현황	33
〈그림 3-8〉 정어리의 국제적 수출입 현황	34
〈그림 3-9〉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에서의 수산물 수입현황	35
〈그림 3-10〉 CSRP 국가의 지형학적 위치	36
〈그림 3-11〉 EU의 양자협정 법적·제도적 근거	49
〈그림 4-1〉 대서양 유지 존속을 위한 기본 방향	71
〈그림 4-2〉 초기 합작회사 설립 개념도	78
〈그림 4-3〉 아프리카 연안국가와의 “패키지딜”을 통한 합작 수행	79
〈그림 4-4〉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략	8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4절 주요 연구결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1966년 11월 그란 카나리아 제도에 ‘강화 1호’가 입항하면서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한 아프리카 연안 조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아프리카 연안 조업은 경제개발 초창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조국 근대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해외 원양 전진기지인 라스팔마스에서 약 20년간(1996년~1987년) 약 1조원을 한국에 송금하였으며, 1987년 한 해에만 1억1천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등 파독광부 15년간의 송금 규모와 맞먹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1977년 연안국들의 EEZ 선포, 1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등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의 공해 조업 어장은 대부분 상실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공해수역에 대해 24개 국제수산기구가 자원상태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서양 트롤어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EU를 중심으로 한 IUU어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서부아프리카 트롤어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더 이상 아프리카 연안국에서 국적선을 이용한 조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국적선이 조업하는 서대, 민어, 조기 등은 저서어류로 연안국 해안의 근접조업이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적선의 조업이 아프리카 연안국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환경단체의 우려와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연안국의 부실한 거버넌스를 이용한 자원 약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적선을 이용한 현지 조업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를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사회를 포함한 EU의 IUU어업 방지를 위한 이행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선박 VMS 설치 및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FMC(조업감시

센터) 설치를 제도화하면서 불법조업의 개연성이 높은 대서양 트롤어업은 더 이상 조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UU어업에 대한 방지 등 국제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50년간 지속되어 왔던 우리나라 대서양 트롤어업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부아프리카의 수산업 현황, 국적선의 조업 현황,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여건, 국적선사의 사업다각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어업의 유지, 존속 방안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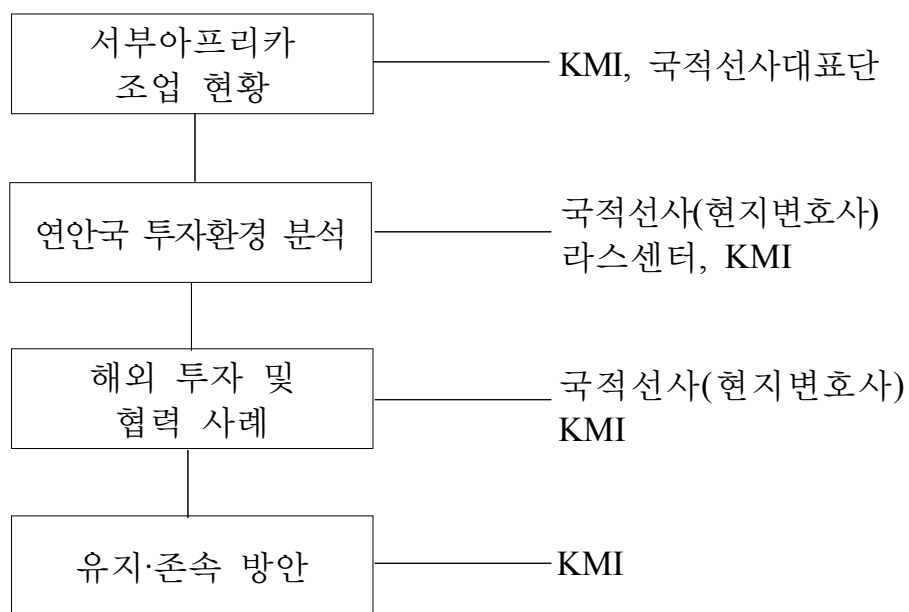
- 서부아프리카 조업현황 분석(우리나라 원양어업 국적선의 조업현황 분석,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타국의 조업현황 분석)
-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의 투자환경 조사(합작진출 희망국에 대한 투자환경 및 법률 조사)
- 사업다각화를 위한 타당성 분석(투자타당성 및 적지조사, 사업다각화 등)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우리 국적선의 합작어업 전환 시 타국 합작선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서양 트롤어업을 영위하는 국적선사의 조사 수요에 따라 진행되었고, 업계가 스스로 직접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서부아프리카에 대한 조사는 현지 조사의 강점이 있는 국적선사 사장단이 실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제 동향 및 유지·존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라스팔마스에 설립된

한·스페인 해양수산협력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을 담보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4절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구 시작시점에는 가능할 것이라 고려했던 아프리카 연안국에서의 합작조업을 통한 12해리 이내 조업이 합작을 하더라도 대서양 트롤 선사의 주요 어장인 기니, 기니비사우 등에서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이 재래식 어선(카누 조업선)의 보호를 위해 자국 어선도 동력을 갖춘 대형어선은 12해리 진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국적선사들이 연안국과 합작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 어종인 서대, 민어, 조기 등에 대해서는 조업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국적선사를 이용한 직접 조업 이외에 동 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가공, 수매 등의 현지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에서는 중국, EU 등의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합작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한국 기업들은 합작보다는 국적선 조업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EU, 중국, 러시아 등의 선박이 중층트롤 조업을 하면서 연안국의 외해에서 조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스페인 등 EU 선박의 주요 목표종이 다랑어류에 집중되어 있는 등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업국들이 전갱이, 정어리, 엔초비 등 중층어류의 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문어 등 일본 수출품 중심에서 최근 중국 본토로의 가공용 어류 또는 아프리카 판매용 어종의 어획으로 변화된 점이 특이하다.

World Bank의 아프리카 지역 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인 시에라리온, 앙골라, 기니, 기니비사우 중에서 투자자 보호, 세금 용이성, 창업 용이성, 신용도 등은 시에라리온의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니는 전기 접근성이 좋으며, 기니비사우는 교역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부문의 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산관련 합작회사가 존재하는 시에라리온이 가장 좋은 투자처로 나타났지만 이미 유럽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합작 진입으로는 효과를 가져 오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부아프리카 트롤선박의 구조개편 방향으로서는 채산성의 문제로 희망어선은 적으나 현 단계의 유일한 대안인 i) 중층트롤로의 전환을 통해 불법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조업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ii) 현 단계에서 입어는 불가능하지만 자원관리형 어업을 전제 조건으로 연안국과의 특별조업 허가를 통해 합작어업을 추진하는 방법, iii) 타 조업 어장으로 이동하는 방법, iv) 대상 어업에 대해 감척을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유일한 대안은 중층트롤로의 전환으로 판단되며, 선박의 진출입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는 아프리카 현지화를 통해 연안어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수매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략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서부아프리카 투자환경 분석

제1절 아프리카 발전 전망

제2절 서부아프리카 투자환경 비교

제3절 서부아프리카 국가별 투자환경

제2장 서부아프리카 투자환경 분석

제1절 아프리카 발전 전망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관론적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개발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 아프리카 저개발의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꼽아보면 i)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열대성 기후, 전염병, 척박한 토양, 수자원 부족 등, ii)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내전, 부패 및 비능률 구조, 국가통치 역량 부재, 국민적 개발 의지 부족 등, iii)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공업화 실패, 열악한 투자환경, 영세한 시장규모, 높은 운송비용(인프라 부족), 취약한 농업기반, 금융 및 자본시장 미발달 등, iv) 인적자본 측면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인적자본 미형성, 두뇌유출 등, v) 대외경제적 요인으로 1차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교역조건 악화, 해외시장과의 단절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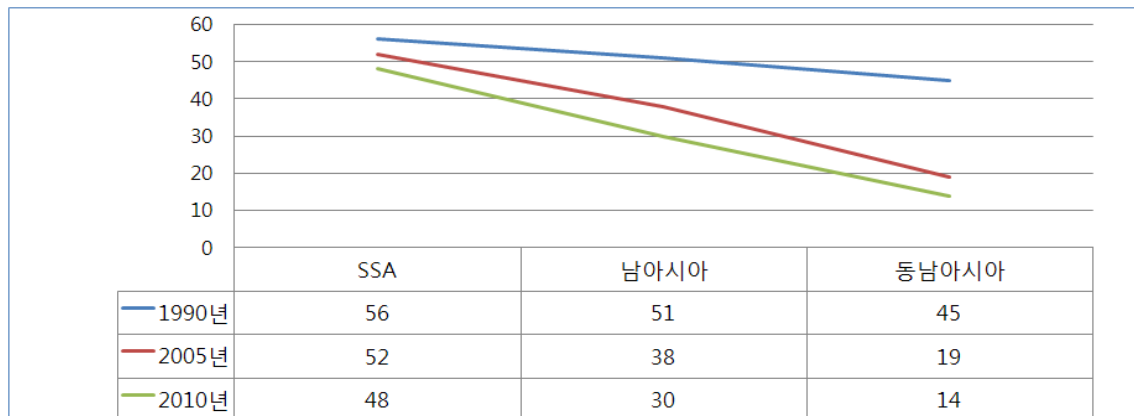
이를 뒷받침 하듯 자원 수출로 확보한 자금이 국가 인프라 사업이 아닌 정권 유지나 일부 계층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등 자원을 통한 성장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통치체제의 비효율성, 치안불안, 부정부패,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 동력 마련이 매우 어렵고, ‘저 투자→저 생산→저 저축→저 소득’의 악순환의 고리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비관적 시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 투자 외 국자본은 전 세계 FDI의 3.2%인 290억 달러에 불과한데다 이 자금도 거의 산유국에 집중되어 있어 아프리카 GDP 규모에 대한 2025년 전망도 세계 경제 비중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아프리카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표 2-1〉 아프리카의 GDP 규모 전망

연도	GDP 규모(10억 달러)	세계 비중(%)
2012년	1,033.0	2.4
2015년	1,210.2	2.6
2020년	1,599.5	3.0
2025년	2,169.0	3.5

자료: UNECA, 2012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원조자금에도 불구하고 빈곤 해소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ODA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루 1.25달러 미만 인구의 비중이 1990년 56%에서 20년이 지난 2010년에도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 기간 남아시아는 51%에서 30% 비중으로 빈곤율이 떨어졌고, 동남아시아는 45%에서 14%로 크게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탈피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UNECA, 2012

〈그림 2-1〉 1일 1.25달러 미만 인구 비중

그러나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비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변화에 기댄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등 역내 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공사(IFC)에서 평가하는 ‘경제개혁 지수’에서 동유럽, OECD 선진국 그룹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꼴찌를 탈출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수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내전문제가 개선되면서 대륙 전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3~5%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FDI도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어 아프리카 발전 전망을 비관적으로만 보기에겐 힘든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제2절 서부아프리카 투자 환경 비교

1. 개요

아프리카는 글로벌 생산거점과 신 금융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년 10.5억 명의 인구는 2050년에 21.9억 명으로 증가하고, 현재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 6%가 2050년에도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젊은 층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은행규모가 작고, 전반적인 금융환경이 열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소득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에만 중형 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은행평균 자산은 22억 달러 수준이고, 평균 예대율은 74%로 국가평균인 109%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공채, 외화채권 등에 투자 성향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민간투자 비중이 낮고, 정부부문, 해외자산, 유동자산의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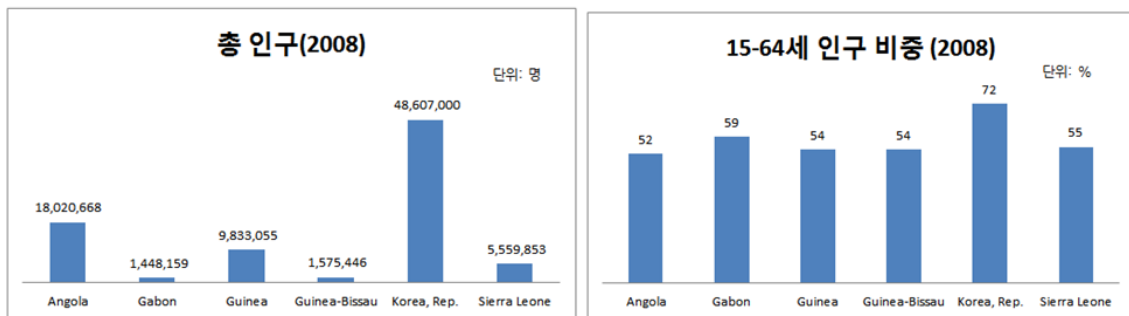
현재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시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차관의 약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개발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은 익스포저 10배를 할당하여 2010년의 경우 10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2007년부터 중국은 국부펀드 형태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China Africa Development Fund, CADF)’를 조성하였으며, 중국 공상은행, 남아공 스탠다드뱅크의 지분 20.1%를 5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의 경우 현재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에도 자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이 우대차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46%, 북아프리카에 15%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0년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석유 부국인 서부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차드에는 농업설비 사업, 적도기니에는 식수공장, 가나에는 농수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아프리카 ODA 규모 및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 주요국의 투자환경 비교

1) 일반 지표

서부아프리카 트롤업계가 조업 가능한 연안국은 앙골라,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이다. 주요 대상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앙골라로 약 2천만 명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가봉 순이며 모두 인구가 1천만 명 미만이다. 15세~64세 미만의 생산가능 인구를 살펴보면, 5개국 모두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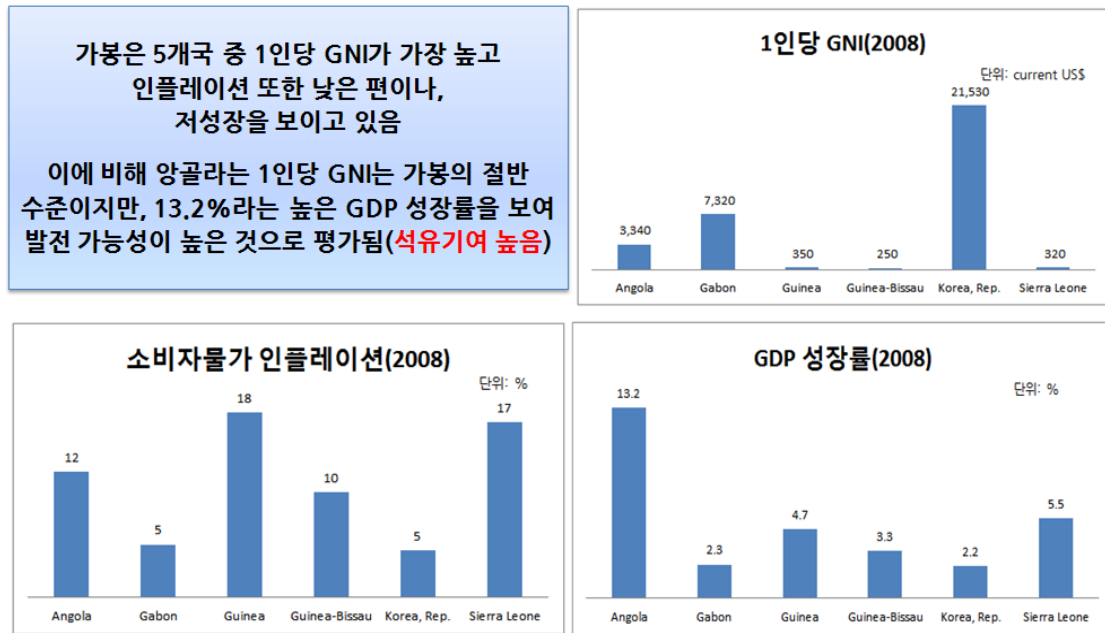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2〉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일반지표(2008년)

2) 경제지표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경제지표를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당 GNI의 경우, 가봉이 \$7,3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앙골라 \$3,340, 기니 \$350, 시에라리온 \$320, 기니비사우 \$250 순이다.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기니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시에라리온 17%, 앙골라 12%, 기니비사우 10%, 가봉 5% 순이다. GDP 성장률은 앙골라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시에라리온 5.5%, 기니 4.7%, 기니비사우 3.3%, 가봉 2.3%의 순이다. 가봉은 5개국 중 1인당 GNI가 가장 높고, 인플레이션 또한 낮은 편이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앙골라의 1인당 GNI는 가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GDP 성장률이 13.2%로 높아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석유 생산이 기여하는 측면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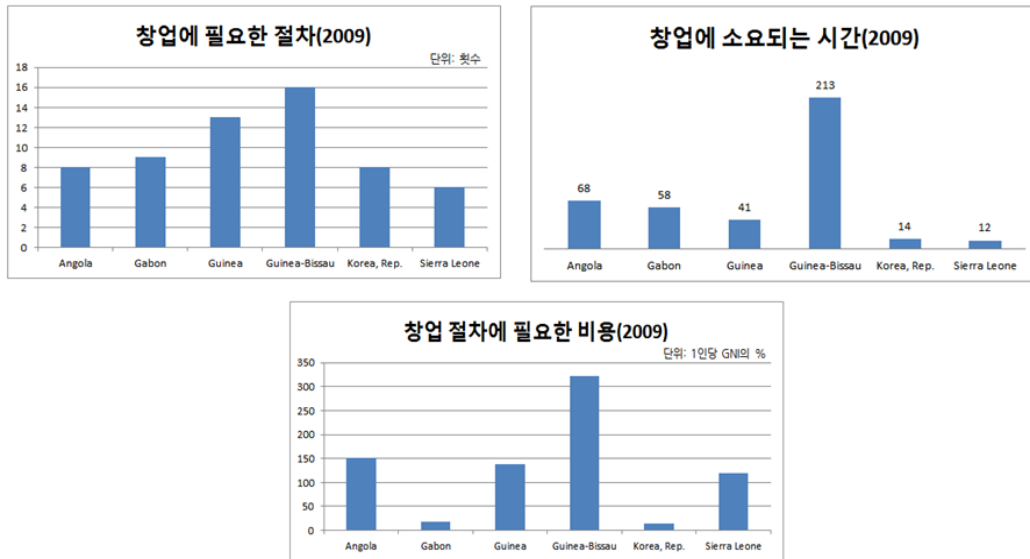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3〉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2008년)

3) 창업지표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창업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기니비사우가 16회로 가장 많아 창업하는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니 13회, 가봉 11회, 앙골라 8회, 시에라리온 6회이다.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니비사우 213시간, 앙골라 68시간, 가봉 58시간, 기니 41시간, 시에라리온 12시간이다. 창업소요 시간 기준으로 기니비사우가 가장 창업하기 어려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기니비사우가 1인당 GNI의 300% 이상이 지출되며, 앙골라 150%, 기니 140%, 가봉 120%이다. 종합적으로 5개국 중 창업 관련 여건이 좋은 나라는 시에라리온과 가봉이며, 기니비사우는 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나쁜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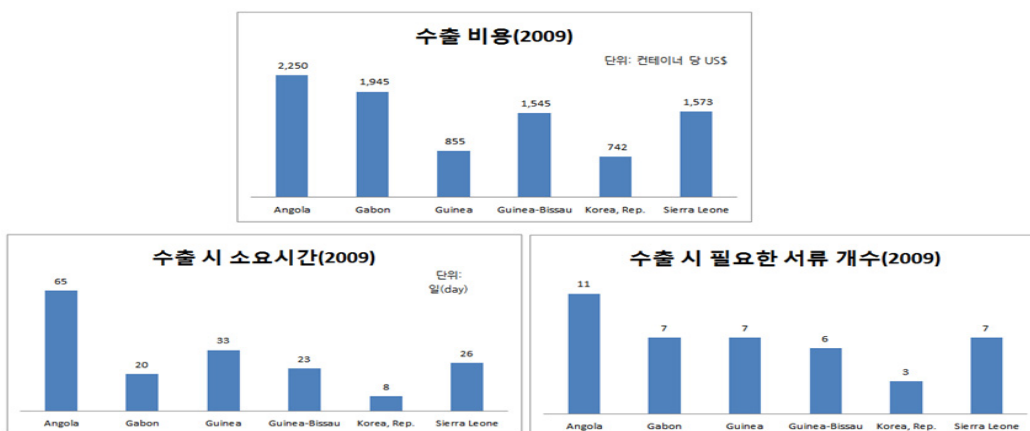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4〉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창업지표(2009년)

4) 수출지표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수출지표를 살펴보면, 컨테이너당 수출비용은 앙골라가 \$2,250로 가장 높았으며 기니는 \$855이다. 특히 기니는 수출비용이 다른 국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 소요시간은 앙골라가 65일로 가장 길었으며, 기니 33일, 시에라리온 26일, 가봉 20일 순이다. 수출시 필요한 서류의 개수는 앙골라 11개, 시에라리온, 가봉, 기니는 각각 7개, 기니비사우 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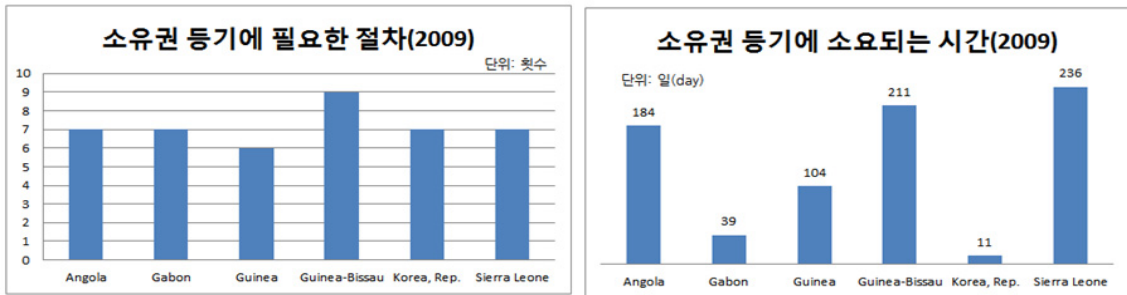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5〉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수출지표(2009년)

5) 소유권 등기 절차 및 시간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절차는 기니비사우가 가장 많은 9개이며, 그 다음으로 앙골라, 가봉, 시에라리온이 각 7개, 기니 6개이다. 소유권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에라리온이 236일로 가장 길었으며, 기니비사우 211일, 앙골라 184일, 기니 104일이고, 가봉이 39일로 가장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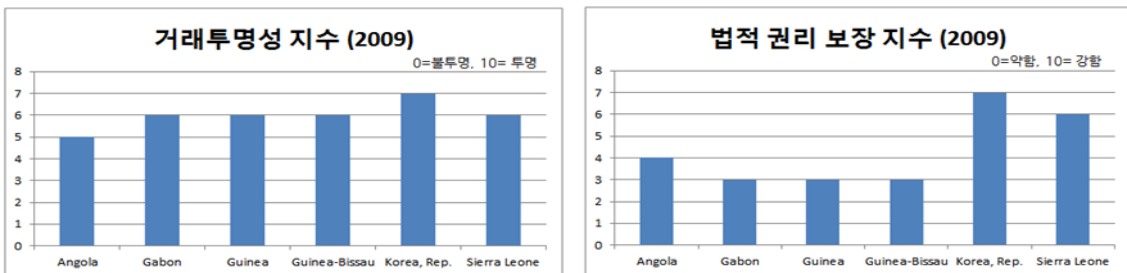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6〉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소유권 등기 절차 및 시간(2009년)

6) 투자자 보호 지수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거래투명성 정도는 5개국 모두 보통 수준을 겨우 넘었으며, 거래투명성 정도는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4개국이 6점으로 동일하였고, 앙골라가 5점으로 가장 낮았다. 법적권리 보장 정도는 시에라리온이 6점으로 가장 높지만 평균 정도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4점 이하로 법적 권리 보장이 평균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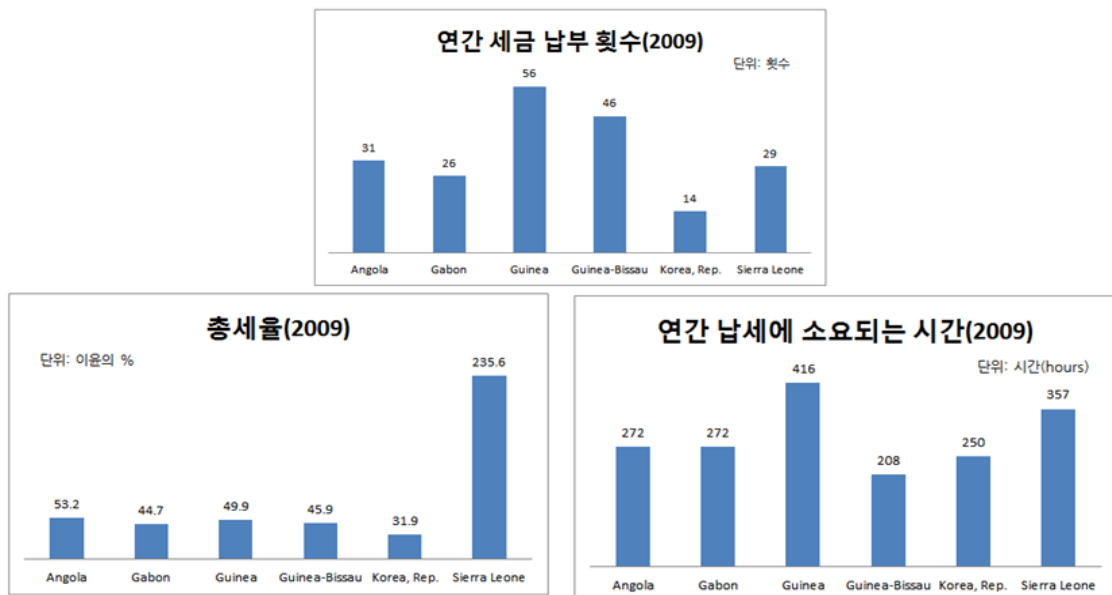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7〉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 지수(2009년)

7) 납세지수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납세지수를 살펴보면, 세금 납부 횟수는 가봉 26회, 시에라리온 29회, 앙골라 31회, 기니비사우 46회, 기니 56회 순으로 납부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율의 경우에는 가봉이 이윤의 44.7% , 기니비사우 45.9%, 기니 49.9%, 앙골라 53.2%, 시에라리온 235.6% 순으로 낮았으며, 납세 소요 시간은 기니비사우 208시간, 앙골라, 가봉 각각 272시간, 시에라리온 357시간, 기니 416시간의 순으로 소요 시간이 적었다.



자료: 세계은행, WDI 2010

〈그림 2-8〉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납세지수(2009년)

8) 투자환경 순위

2013년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Doing Business 투자환경 조사에서 총 185개 투자환경을 비교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140위로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앙골라 172위, 기니 178위, 기니비사우 179위로 나타났다.

	시에라리온	앙골라	기니	기니비사우
전기 접근성	3 (176위)	2 (113위)	1 (88위)	4 (182위)
투자자 보호	1 (32위)	2 (70위)	4 (177위)	3 (139위)
세금 용이성	1 (117위)	3 (154위)	4 (183위)	2 (146위)
창업 용이성	1 (76위)	4 (171위)	3 (158위)	2 (148위)
신용도	1 (83위)	2 (129위)	3 (154위)	2 (129위)
교역 환경	2 (131위)	4 (164위)	3 (133위)	1 (116위)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3

〈그림 2-9〉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의 분야별 투자환경 비교

3. 아프리카 진출지원 금융기관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금융기관은 국내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ica Export-Import Bank, AEIB),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 AfDB) 등이 있다.

우선 국내 수출신용기관인 ECA는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 보증, 보험 등 공적 수출신용 공여를 제공하며, 국내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EDCF 2억 달러 규모의 협조용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수출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 5천만 달러 은행 간 수출신용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시 계약파기, 파산 등 신용위험과 전쟁내란 등 비상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AEIB는 1993년 아프리카 지역 내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출자국 소재 은행 및 출자은행에 대한 신용한도 설정을 통해 수출입업체 대출보증을 지원하며,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시 공동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다자간 투자보증기구인 MIGA는 세계은행그룹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다. 보증, 협조인수, 투자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등)를 지원한다. 신규 직접투자가 대상이며 몰수, 정부의 계약위반, 전쟁 등 정치적 위험이 보증대상이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한 이후 2012년 6월 수자원공사가 MIGA와 보증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78개국에 이른다. 대출, 지분투자, 지급보증, 신디케이트드론 등이 주요 업무이며 한국수출입은행 차관공여, 신탁기금 추가출연(2012.10) 등 아프리카 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신디케이트드론 등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제3절 서부아프리카 국가별 투자환경

1. 기니

기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998년 기니투자법과 OHADA¹⁾(Organiza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관련 기관은 중소기업부와 기니 사적투자진흥기관(National Agency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s, APIP)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인 설립시 필수 조건은 기업자본이 약 2만 달러 이상, 연간 매출액이 52만 달러 이상이며 고용직원 50명 이상인 경우 감시담당자(auditor)가 있어야 한다. 법인은 Limited Company와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구분된다. Limited Company는 자본금 14,350달러 이하의 경우 공증비와 세금이 각각 약 1천 달러로 1%이며, 자본 14,350달러 초과 시 공증비와 세금은 각각 0.5%, 0.5%이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자본금 14,350달러 이하의 경우 공증비와 세금은 각각 약 574달러, 약 287달러이며 자본 14,350달러 초과 시 공증비와 세금은 각각 0.5%, 0.5%이다. 기니의 임금기준을 살펴보면, 기니국적자의 경우 광업 기준으로 2013년 최저보장임금이 63달러(440,000 GNF)이다. 직업별로 보면, 운전수는 502달러(3,500,000 GNF), 중간관리자 1,435달러(3,500,000 GNF), 고위관리자 3,587달러(25,000,000 GNF)이다. 해외국적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니 국적자와 동일 원칙이 적용되나 실질적으로는 기니 국적자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다. 기니는 1994년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모든 회사는 국가사회보장은행(Bank of National Social Security)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²⁾

2.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로의 투자는 기니비사우 투자법(Law No. 3. 2011)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은 투자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2011년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투자법을 발효하였다. 투자법 10항에 따라 인센티브의 종류를 i) 투자초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투자 인센티브, ii) 설립 초기연도에 주어지는 고용과 비즈니스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iii) 인재 훈련에 관한 인센티브, iv) 공공 인프라에 관한 인센티브 등 4

1) OHADA는 “Organiza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의 약자로 17개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 기업법이다.

2) 기니정부 내부자료.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8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11항은 인센티브의 제공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만4천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새로 창업하는 경우, 혹은 기존 사업의 현재화, 확장, 다양화 등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제12항은 인센티브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i) 해당 부서에 신청 문서 제출, ii) 문서 검토, iii)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iv) 지급 담당 부서의 평가 및 등록(5일 이내), v) 최종 결정(48시간 이내), vi) 재정부에 의한 마감기한 수정 가능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13항은 설비 초기단계의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 자본설비에 대해 대외공통관세를 면제하고, 일반판매세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제14항은 설립 운영단계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7년 동안 점진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기 2년까지 100%, 3년 90%, 4년 80%, 5년 60%, 6년 40%, 7년 20%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15항은 인재 훈련 관련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등록기관에서 인재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16항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로 공공시설, 도로, 항구 등의 건설 지출 비용에 대하여 3년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법 18항은 갈등조정 및 중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갈등해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³⁾

3.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의 투자관련법 및 제도는 2005년 시에라리온 투자법에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일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는데 관련 장비 수입 시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원재료 수입세는 3%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세금은 법인세 30%, 정부세 15%, 소득세 15~30% 수준이다.

시에라리온은 수산분야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에게 선박제도 및 운용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125%를 공제해 주고, 수출품목 포장 디자인 소요 비용의 125% 공제, 2천만 불 초과 규모의 PPP 인프라 프로젝트(항만개발, 양륙장 개발 등)에 대해서는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

3) 기니비사우정부 내부자료.

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시에라리온 프리타운(Freetown) 항구는 유럽시장과 근접한 주요 교역항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Bollore Africa Logistics라는 프랑스계 회사에 20년간 위탁경영을 위임했으며, 현재 글로벌 교역허브 항구로 개발하기 위한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도 1984년부터 Fujian-Africa Fishing Company, Okey Agent Company 등 합작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총 30개 중국 회사가 천연자원 분야 개발을 위해 운영 중이다.⁴⁾

4. 앙골라

앙골라의 투자관련법 및 제도는 민간투자기본법과 민간투자세제인센티브법의 적용을 받는다. 앙골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앙골라투자청(ANIP)을 설립하였으며, 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앙골라투자청(ANIP)은 외국인투자 10만~500만 달러, 내국인 투자 프로젝트 5만 달러 이상은 신고하고,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계약법 대상이며 각료회의 투자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에 가공, 어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앙골라는 투자인센티브지역을 두고 투자지역을 Zone A, Zone B, Zone C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고 있다. Zone A의 경우 Lunada주, Benguela주, Huila주, Canbinda주의 수도 및 Lobito시가 해당되며, 인센티브는 관세, 투자운영수수료 3년간 면제,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 8년간 면제,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 지불 5년간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Zone B는 Kwanza norte, Bengo, Uige, Kwanza Sul, Lunada Norte, Lunda Sul 주 등이 해당되며, 인센티브로는 관세, 투자운영수수료 4년간 면제,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 12년간 면제,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 지불 10년간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Zone C의 경우, Huambo, Bie, Moxico, Kuando Kubango, Cunene, Namibe, Malange, Zaire 등의 해당되며, 인센티브는 관세, 투자운영수수료 6년간 면제,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 15년간 면제,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 15년간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허가서(CROP)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여권 번역, 범죄경력증명서, 위임장, 법인명 지정, 정관 초안, 투자제

4) 시에라리온 정부 내부자료.

획 양식작성, 세금완납 증명서 등이다. 회사설립 절차는 사무실 지정, 은행구좌개설, 이사 서명등록, 자본재 수입허가, 자본금 앙골라 상업은행 입금, 앙골라 중앙은행에 자본금 입금 신고, 앙골라 정관등록, 관보에 회사설립 공포, 외국 파트너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 노동비자 신청, 앙골라 법인에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 비자신청, 회사설립 번호, 납세자 번호 등이 필요하며, 허가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로 번역 공증하여 주한 앙골라 영사 인증 후 한국 외무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으로 건설공사 근로자 월급여 150~350 달러, 사무직 500~1,500달러 내외가 지급된다. 휴가는 1년에 1개월(일요일 포함), 휴가수당은 기본급의 100%,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보너스는 1년 이상 연속 근무자에 한해서 연말에 기본급료 1개월분을 더 지급한다. 병가 시 지병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치료시 6개월까지 매월 급료를 지급한다. 사회보장세는 본인 기본 급료에 8%이며 이중 5%는 회사가 부담하고 3%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⁵⁾

5) KOTRA, “미개척 유망시장을 간다. 앙골라편”, 2008.

제3장 서부아프리카 수산업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조업 현황

제3절 교역 현황

제4절 진출 여건

제5절 EU의 진출 사례

제3장 서부아프리카 수산업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1. 해역의 범위

서부아프리카에는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코트뒤푸아르, DR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모두 2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FAO 기준으로 34해구에 포함된 대서양 중동부 어장(내륙 포함)은 앙골라, 베닌,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DR콩고, 코트뒤푸아르, 적도기니, 가봉, 감비아, 가마,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로코,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17개 국가들이다. 여기서 한국 국적의 트롤선들이 주로 민어, 조기, 서대 등을 조업하는 연안국은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이 중심이며 위로는 감비아, 아래로는 앙골라까지의 해역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안에는 한국의 합작선들이 인터볼고를 중심으로 앙골라 해역에 진출해 있으며, 신라교역의 파노피 등과 같은 합작회사는 가나에서 참치를 조업하고 현지 가공사업도 하고 있다. 한국의 조업선은 없지만 동원산업의 합작 가공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S.C.A.SA)는 참치캔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트롤선사의 합작진출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단의 주요 목표 어종이 있는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가봉, 앙골라 등의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34해구 조업현황

FAO 34해구의 경우, 아프리카 연안국의 생산과 EU,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조업국의 생산으로 크게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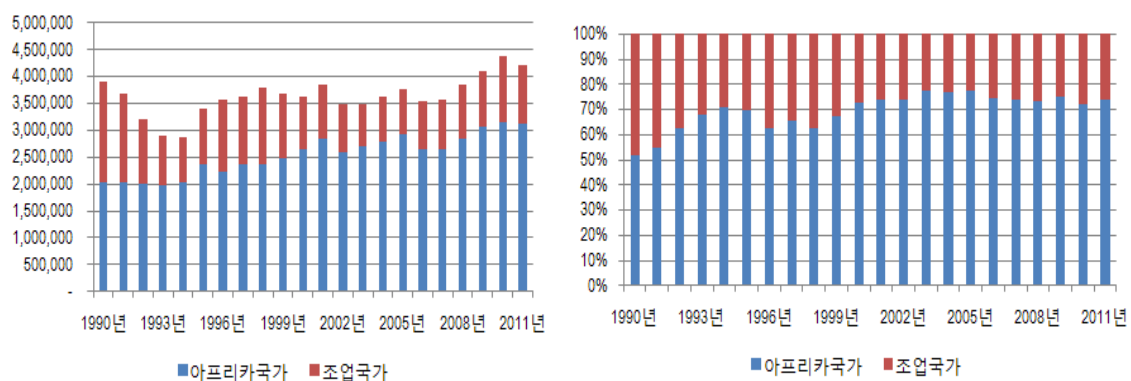


자료: FAO 홈페이지

〈그림 3-1〉 서부아프리카 34해구 구역도

동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 39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11년 기준 420만 톤 수준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해역의 생산량을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의 생산량과 조업국의 생산량으로 구분하면, 1990년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조업량은 200만 톤 수준(52% 수준)이었으나 2011년 320만 톤 수준(74% 수준)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중국 등의 조업 합작전환에 따른 결과이며, 현재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업행태가 카누조업에 거의 머물러 있고, 주요 대형 선박들이 조업국과 연안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조업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자체 어선증대로 1백만 톤 이상 수산물 생산이 증대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2011년 조업국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벨리즈 25만 톤, 러시아 20만 톤, 스페인 15만 톤, 네덜란드 12만 톤, 리투아니아 11만 톤 수준이며, 이들 국가 중 한국(국적선사 기준)은 9위로 약 4만 톤을 동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2〉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 조업국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

제2절 조업 현황

1. 서부아프리카의 수산물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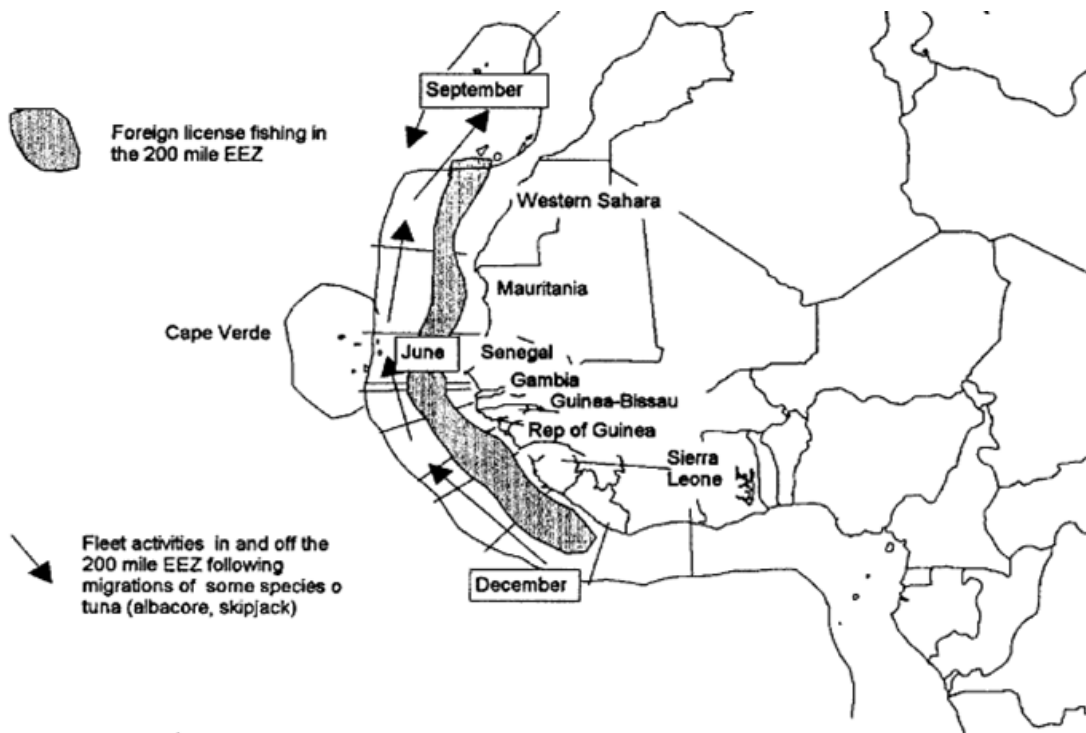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벨리즈, 러시아, 스페인, 리투아니아, 한국, 중국 등이다. 주요 조업국들은 전갱이, 정어리, 엔초비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참치 어획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주력 어획어종의 변동이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의 어획어종 구성은 문어, 갑오징어, 돔 등 일본 수출을 위한 어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등 중국 본토 수급용 또는 아프리카 판매용 수산물을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층트롤 어법으로 조업하는 어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저층트롤을 통해 민어, 조기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용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대기업이 가다랑어, 눈다랑어 등을 생산한바 있다.

벨리즈	2011년(톤)	러시아	2011년(톤)
Jack and horse mackerels nei	109,417	Jack and horse mackerels nei	80,231
Sardinellas nei	49,567	Chub mackerel	56,696
European pilchard(=Sardine)	29,849	European pilchard(=Sardine)	29,410
European anchovy	29,245	Round sardinella	22,665
Chub mackerel	22,791	European anchovy	9,509
스페인	2011년(톤)	리투아니아	2011년(톤)
Skipjack tuna	56,604	Round sardinella	32,876
Blue shark	24,503	Jack and horse mackerels nei	28,028
Yellowfin tuna	20,813	European pilchard(=Sardine)	25,565
Bigeye tuna	14,555	Chub mackerel	13,281
Senegalese hake	6,336		
중국	2001년(톤)	중국	2011년(톤)
Marine fishes nei	10,031	European pilchard(=Sardine)	11,025
Cuttlefish, bobtail squids nei	8,238	Chub mackerel	9,613
Octopuses, etc. nei	5,130	Jack and horse mackerels nei	3,110
Porgies, seabreams nei	3,638	Bigeye tuna	3,060
Bigeye tuna	2,897	Sardinellas nei	287
한국	2011년(톤)		
Croakers, drums nei	11,493		
Marine fishes nei	10,290		
Skipjack tuna	4,643		
Bigeye tuna	2,274		
Tonguefishes	1,568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3〉 서부아프리카 주요 조업국의 생산현황

서부아프리카 200마일 내의 해역에서 참치를 조업하는 유럽의 선박들은 6월, 9월, 12월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하고 있다. 이러한 조업은 EU가 각 연안국들과 어업협정을 통해 고정적으로 입어료를 지불하거나 각 개별 선사의 배들이 직접 입어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유럽으로서는 서부아프리카 어장이 참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장 중 하나이다.



자료: Kaczynski & Fluharty, 2002

〈그림 3-4〉 서부아프리카에서의 외국 조업선의 조업활동

2. 서부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의 생산현황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한국 국적선이 주로 조업하는 국가는 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앙골라 등이다. 이들 국가 중 시에라리온과 앙골라의 수산물 생산이 증대되었으며, 기니, 기니비사우는 수산물 생산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국가별 합작 정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니	2011년(톤)	연평균 증감률(10년간)	시에라리온	2011년(톤)	연평균 증감률(10년간)
Bonga shad	40,000	0.9	Bonga shad	84,400	10.4
Marine fishes nei	21,000	1.4	Sardinellas nei	19,800	4.1
Sea catfishes nei	9,000	4.5	Bobo croaker	12,000	14.0
Bobo croaker	7,000	-0.1	Marine fishes nei	8,500	9.1
Sardinellas nei	5,200	-1.9	WestAfrican croakers nei	7,650	18.8
Westafrican croakers nei	5,100	3.2			

앙골라	2011년(톤)	연평균 증감률(10년간)	기니비사우	2011년(톤)	연평균 증감률(10년간)
Sardinellas nei	74,000	10.0	Marine fishes nei	2,569	-0.3
Marine fishes nei	36,000	-7.4	Mullets nei	1,500	0.0
Dentex nei	29,000	12.5			
Westafrican croakers nei	18,400	-3.4			
Shothern meagre	16,600	15.9			
Cunene horse mackerel	15,000	-10.1			
Sea catfishes nei	10,700	11.5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5〉 서부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의 수산물 생산현황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상업적 어선어업, 소규모 재래식 어선어업, 내수면 어업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업적 어선들은 대부분 유럽, 중국 등 합작회사의 소유이다. 국내에서는 서부아프리카 내부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한국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출장을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시에라리온과 기니에 두 국가에 대해서만 본 보고서에서는 적시하였다.

1)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연근해에는 약 45만 톤의 수산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약 5억 불의 가치에 달한다. 시에라리온 GDP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 수준으로 연안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이다. 상업적 어선은 외국자본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재래식 어선어업은 시에라리온 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자 중요한 고용창출원이다. 카누를 통한 재래식 어선어업은 약 10만 톤을 생산하고 약 640곳의 양륙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카누조업선의 직접적인 고용은 3만 명에 이른다. 내수면 어업으로는 약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틸라피아와 메기류를 생산하고 있다.⁶⁾

6) Salieu Sankoh and Kadijatu Jallo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Fisheries Sector", KORAFF, 2013.



자료: Sankoh and Jalloh, 2013

〈그림 3-6〉 시에라리온 톰보(Tombo)항과 재래식 카누선

2009년 기준으로 상업적어선과 재래식어선으로 생산되는 수산물 생산량은 약 26만 톤이다. 2008년까지는 20만 톤 이내로 생산되었으나 2009년부터 생산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외국자본에 의해 합작어업으로 생산되는 시에라리온의 대표적인 어종은 저서어류로 연간 약 15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카누조업선에 의한 재래식 어선으로는 약 24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표 3-1〉 시에라리온의 상업적 어선과 재래식어선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톤)

구분	상업적어선								재래식어선	합계
연도	Shrimp	Lobster& Crab	Cuttlefish	Snail	Sharks & Ray	Demersal Fish	Tunas	Pelagics	Mix Fish	Industrial and Artisanal
2000	1,505	298	308	-	-	11,127	-	1,061	45,910	60,109
2001	1,277	337	1169	-	120	10,993	6,166	2,536	30,050	62,548
2002	1,119	194	3,562	-	126	7,315	-	1,405	55,659	69,380
2003	1,541	215	4,598	-	150	9,549	-	1,112	65,458	82,623
2004	1,445	127	1,596	1,266	175	8,011	-	1,611	106,216	120,447
2005	1,378	106	2,017	1,883	135	7,756	-	2,522	116,614	132,411
2006	1,354	159	982	1,065	143	8,526	-	1,413	120,490	134,132
2007	1,365	262	790	925	166	14,091	-	1,337	111,937	130,873
2008	932	1,212			221	12,041	-	4,647	171,126	190,187
2009	828	1,197			108	14,339	-	3,176	243,634	263,291

자료: 시에라리온 정부 내부자료

2) 기니

2011년 기니에 등록된 자국 연안조업선과 냉동선(상업적어선)에서 어획한 총 어획량은 155,323톤이다. 카누조업선은 총 6,029척이며, 생산량은 96,017톤이다. 냉동시설을 갖춘 상업적 어선은 113척이 있으며 생산량은 59,306톤이다. 기니에서는 카누조업선이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수산물이 약 96,017톤이며, 상업적 조업선인 냉동선이 판매하는 수산물은 16,321톤이다. 기니 조업선 중 냉동선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합작선들로 이들 합작선들이 잡은 수산물은 국내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기니 선박별 조업척수 및 생산량

구 분	척수(척)	생산량(톤)	국내판매(톤)
카누조업선	6,029	96,017	96,017
냉동선(상업적어선)	113	59,306	16,321
합계	6,142	155,323	112,338

자료: 기니 정부 내부자료

기니의 업종은 크게 중층 및 선망어업, 연안트롤 및 자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층 및 선망어업의 생산량은 80,112톤, 연안트롤 및 자망어업은 72,686톤이다. 국내 판매분을 업종별로 보면 중층 및 선망어업이 판매하는 수산물은 72,131톤, 연안 소형트롤 및 자망선이 판매하는 수산물의 양은 37,307톤이다.

〈표 3-3〉 기니 업종별 조업척수 및 생산량

구 분	생산량(톤)	국내판매(톤)
중층 및 선망어업	80,112	72,131
연안 트롤 및 자망어업	72,686	37,307
기 타	2,525	2,900
합 계	155,323	112,338

자료: 기니 정부 내부자료

기니 어장에 진출한 선단별·어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자망을 사용하는 카누조업선의 목표 어종은 Catfish, Bobo croacker, croacker로 기니인과 외국인이 조업을 하며 주로 수출용이다. 연간 약 7.5톤을 생산하고, 기니 연안 어업인들의 고용 및 소득에 기

여하고 있다. 대부분은 유럽, 아시아, 미국으로 수출되며 식량안보의 측면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망을 사용하는 카누조업선은 *Ethmalosa, fimbriata*를 생산하는데 이는 카누조업선에서 50% 이상 생산된다. 맹그로브 등 연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으나 약 6천여 명이 인망조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된다. 또한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한 훈제 시에는 여성노동력이 많이 사용되므로 여성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카누연승선은 *Snaper, Emperor*를 주로 조업하며, 연간 3천 톤 정도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산물의 2/3는 수출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어획물을 수매하는 업자들이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적 어선은 메기, 민어 등 저층 수산물을 조업하는 어선과 새우를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수산물은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며, 코나크리에 일부만이 의무 양륙된다. 상업적 어선은 연안조업인과 갈등이 있지만 연안조업인이 상업용 어선에 수산물을 판매하기도 하므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다.

〈표 3-4〉 기니 어장 진출 선단별·어구별 특징

선단	어구	목표어종	생산자/수량/생태	경제적 측면	사회적측면
Salan (카누)	자망	Catfish, Bobo croacker, croacker	기니인/외국인 조업, 주로 수출 7.5톤 생산	높은 소득과 고용 생산물 2/3 가공 유럽/아시아/미국 수출	식량안보와 고용에 기여
Flimbote (카누)	인망	Ethmalosa, fimbriata	카누조업선 조업이 50% 이상 생산 mangrove에 악영향	6,378명 종사 내수용 수산물	연안어업인에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산업, 훈제시 여성노동력 중요
Salan (카누)	연승	Snaper, Emperor	카누/상업어선 2,875톤 생산	생산물 2/3 수출 수매업자 존재 고수익 분야	식량안보와 고용
트롤선 (상업용)	트롤	Catfish, Bobo croacker, croaker	기니 기지의 트롤선 90%이상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 6,148톤 생산(7종에 집중)	외국인 생산 90% 수출 코나크리 일부 양륙	연안조업인과 갈등있지만 상호 보완 관계
트롤선 (상업용)	트롤	새우	연안과 공해에서 외국 트롤선조업 유럽시장 수출 1,787톤 생산 부수어획 많음	외국인 생산 새우만 조업 코나크리 일부 양륙	연안조업인과 갈등있지만 상호 보완 관계

자료: Alkaly Doumbouta, 2013

제3절 교역 현황

1. 주요어종의 수출입 현황

1) 고등어

고등어는 선진국이 수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노르웨이, 영국, 일본, 나미비아, 스페인, 중국, 네덜란드, 한국, 대만의 순이다. 세계적으로 노르웨이는 약 18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영국 14만 톤, 일본 13만 톤, 나미비아 9만 톤, 스페인 7만 톤, 중국 6만 톤, 네덜란드와 한국이 각각 5만 톤, 대만이 4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나미비아가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수입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순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3년 평균 연간 6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나는 20만 톤, 카메룬은 10만 톤의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어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식량자원임을 알 수 있다.

수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평균
Norway	173,131	175,849	198,519	182,500
United Kingdom	132,882	115,843	174,680	141,135
Japan	158,185	134,664	87,610	126,820
Namibia	69,573	99,592	87,909	85,691
Spain	42,714	66,602	97,627	68,981
China	35,894	53,022	84,564	57,827
Netherlands	67,602	45,914	47,414	53,643
Korea, Republic of	25,901	57,704	68,385	50,663
Taiwan Province of China	42,873	28,466	44,243	38,527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평균
Nigeria	997,888	399,475	325,629	574,331
Ghana	230,239	139,440	111,508	160,396
Cameroon	88,063	99,511	130,807	106,127
Thailand	57,484	111,445	102,659	90,529
Philippines	66,768	77,245	112,098	85,370
Russian Federation	86,014	78,595	87,615	84,075
China	73,436	79,346	63,254	72,012
Indonesia	25,030	50,691	91,137	55,619
Norway	40,468	40,763	84,147	55,126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7〉 고등어의 국제적 수출입 현황

2) 정어리

정어리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이지만 유럽의 국가들이 임어료를 내고 서부아프리카에서 조업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통계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생산하며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내 국가간 수출입이 매우 활발한 어종이다. 정어리의 수출국은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연평균 54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모로코 20만 톤, 스웨덴 15만 톤, 네덜란드 13만 톤, 독일 13만 톤, 미국 12만 톤, 덴마크 11만 톤, 스페인 10만 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9만 톤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은 러시아 32만 톤, 우크라이나 17만 톤, 나이지리아 17만 톤, 덴마크 15만 톤, 독일 11만 톤, 네덜란드 10만 톤, 코트디브아르 10만 톤, 중국 7만 톤, 스페인 6만 톤, 태국 6만 톤의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수출국 중에는 모로코가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세계 2위였으며 수입국 중에는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입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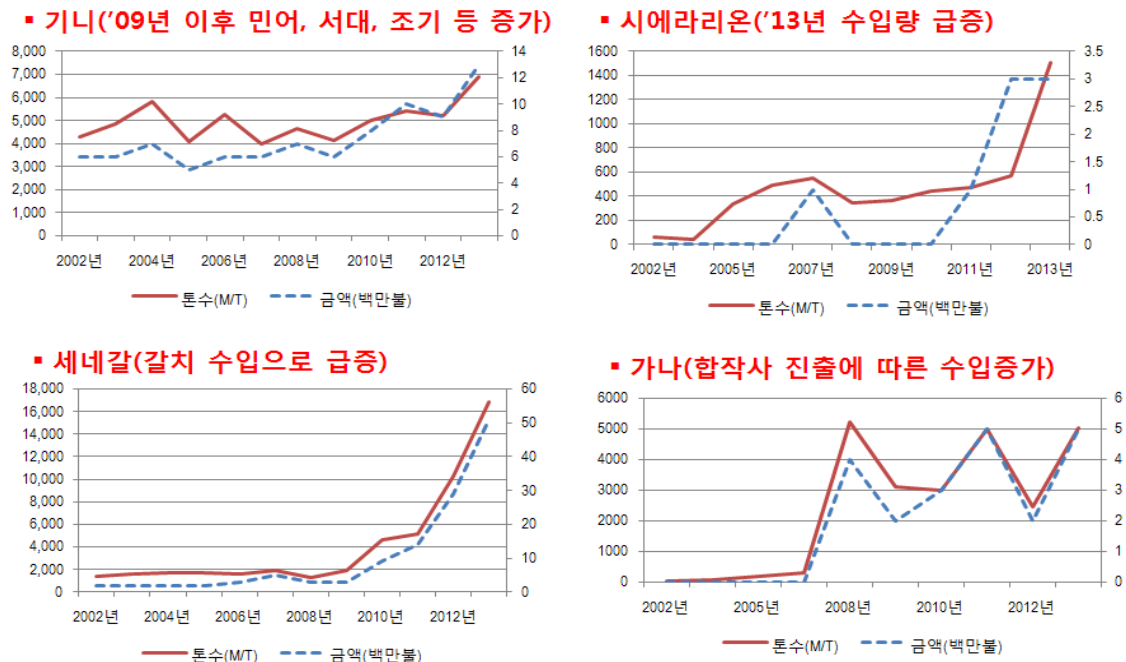
수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평균
Norway	484,925	564,754	570,028	539,902
Morocco	186,822	207,908	217,554	204,095
Sweden	149,328	144,485	148,193	147,335
Netherlands	152,957	121,525	124,985	133,156
Germany	144,207	124,556	107,772	125,512
United States of America	127,370	109,429	116,509	117,769
Denmark	89,325	122,739	117,120	109,728
Spain	97,439	88,399	99,457	95,098
Poland	86,587	89,545	108,300	94,811
Estonia	83,894	92,262	92,980	89,712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평균
Russian Federation	375,680	304,829	291,249	323,919
Ukraine	166,367	172,363	176,305	171,678
Nigeria	265,925	181,069	63,655	170,216
Denmark	151,686	152,392	151,965	152,014
Germany	112,499	121,927	102,143	112,190
Netherlands	100,188	82,128	123,012	101,776
Cote d'Ivoire	80,787	94,671	110,135	95,198
China	70,531	74,950	75,279	73,587
Spain	57,060	39,964	82,804	59,943
Thailand	40,966	50,046	86,487	59,166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8〉 정어리의 국제적 수출입 현황

2. 한국의 대 아프리카 수산물 수입 현황

아프리카 해역은 한국의 수산물 수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특히 아프리카 해역은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민어, 서대, 조기 등 국내 대중 어종의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어 등 제수용품의 중요 공급지이다. 2009년 이후 기니 어장에서 생산된 민어, 서대, 조기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7천 톤, 금액으로는 1,2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고 있다. 기니아어장에서의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 육상동결업자(수입업자) 회사가 약 20여 개 진출해 있으며 이들 회사는 연안 조업인에게 카누와 어구를 제공해주고 생산된 수산물을 거두어 육상에서 동결, 한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다. 기니 어장과 유사한 어종을 생산하는 시에라리온은 기니 코나크리 어장만큼 넓지는 않지만 대체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네갈 갈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신라교역의 파노피 등 합작사 진출에 의해 주로 참치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 FAO Fishstat Plus

〈그림 3-9〉 서부아프리카 주요국에서의 수산물 수입현황

제4절 진출 여건

1. CSRP 범위

CSRP(Commission Sous Regionale des Peches) 국가는 1985년에 설립된 정부 간 조직체로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 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CTA, 2006

〈그림 3-10〉 CSRP 국가의 지형학적 위치

CSRP 국가 중 세네갈과 모리타니아는 가장 중요한 어로자원 보유 국가이다. 세네갈은 이 지역의 어업강국으로 생산성이 높은 영세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기술적 적응 능력을 증명하고 있으며, 영세어선의 생산량은 35만 톤에 이른다. 이것은 10만 톤을 넘지 않는 산업적 선단의 하역량 보다 훨씬 많은 양이며 세네갈의 어업부문의 고용 인구는 60만에 달한다. 또한 모리타니아는 어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여 어업부문이 GDP의 1/4,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획생산량은 50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 중 95%가 외국선단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감비아는 해안선이 70km로 매우 짧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비아 강의 내수면에서 중요한 어업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어획량은 4만 톤에 불과하나 감비아 인구의 영양분 공급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⁷⁾.

2. 어업관련 규정⁸⁾

서부아프리카 국가는 어업관련 규정과 조치를 제정·공표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체계는 기본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적용 및 응용을 위해 행정명령과 포고로 분할되어 있다. 법령은 규정의 배경을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자원 이용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업에 대한 관리의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규정집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인데 이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프리카에서 어업분야의 법령화는 모로코에서 1919년에 시작되었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세네갈의 경우 1976년에 첫 번째 법령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법령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법령화는 2000년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되어 제정되었다. 어업의 유형은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영세어업과 상업적 어업으로 구분하며, 두 형태의 어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업단위, 포획수단, 저장 기술에 대한 규제 방식에 따라 규정한다.

모로코의 어업관련 규정은 수산법, 행정명령, 포고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산법은 어업에 대한 규율을 정한 법령,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을 정한 법령, 해양어업에 대한 규정을 정한 법령이 있다. 행정명령은 모로코 해안만과 수역의 경계, 배타적 경제수역의 규정, 항해 중 연료 및 윤활유의 사용 권한과 세금에 관한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면허의 양도와 갱신에 관한 명령, 원양 어종의 어업을 위한 용선세금에 관한 명령, 동력 엔진 및 어업수역에서의 증명서 목록에 관한 명령, 어로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고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명령 등이 있다. 포고 사항에는 굵은 단섬유로 제작된 고정그물망 사용에 대한 금지, 서부 해역에서 원양 어종의 어획을 위한 외국어선의 용선 발급과 허가조건을 규정하는 포고, 특정 원양 어종의 어획에 대한 일시적 금지에 관한 포고 등이 있다.

7) 아프리카의 법률자료는 다양한 언어(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로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영어 자료는 번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프랑스 CTA의 불문 보고서인 "L'avenir des relations pêche ACP-UE"(2006)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8) 전게서

〈표 3-5〉 모로코 어업관련 규정

구 분	모로코
수 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1-73-255 : 어업에 대한 규율을 정한 법령 o N. 1-81: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을 정한 법령 o Dahir N. 1-10-122 : 해양어업에 대한 규정을 정한 N.19-7과 N. 1-73-255의 공포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1 Rejeb 1395의 n. 2-75-311(1975.7.21.) : 모로코 해안만과 수역의 경계,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 o 18 Rebia II 1406(1985. 12. 31)의 N. 2-85-890 : 항해 중의 연료 및 윤활유의 사용 권한과 세금에 관한 명령 o 4 Rejeb 1413의 N. 2-92-102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면허의 양도와 갱신에 관 명령 o 18 Chaabane 1415의 N. 2-94-931 : 원양 어종의 어업을 위한 용선 세금에 관한 명령 o 17 ramadan 1419의 N. 2-98-938 : 동력 엔진, 어업수역에서의 증명서 목록에 관한 명령 o 29 moharrem 1421의 N. 2-99-1257 : 어로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고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명령
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3 rabii 1415의 N. 2395-94(모로코 수산청 포고) : 굵은 단섬유로 제작된 고정그물망 사용에 대한 금지 o 16 chaabane 1415의 N. 31-95(모로코 수산청 포고) : 서부 행역에서 원양 어종의 어획을 위한 외국어선의 용선 발급과 허가조건을 규정하는 포고 o 13 rabii 1419의 N. 2015-98 : 특정 원양 어종의 어획에 대한 일시적 금지에 관한 포고

자료: CTA, 2006

모리타니아의 어업관련 규정 중 수산법에는 해양영토, 연장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내륙에 대한 경계와 위상에 관한 법령과 법령 N.2007-022(2007.4.9.)에 의해 수정·완성된 수산법령이 있다. 행정명령 사항으로는 Banc d'Arguin 국립공원에 관한 법률, 어업접근권의 배분 방식에 관한 명령, 어업감시제 제도에 관한 명령, 수산물 수출 등 상업화에 관한 명령 등이 있다. 포고 사항으로는 원양어업 허가 부여 조건에 관한 포고, 원양어업 허가 부여 조건에 관한 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 접근의 재정적 조건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표 3-6〉 모리타니아 어업관련 규정

구 분	모리타니아
수 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88-120(1988.8.31) : 해양영토, 연장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내륙에 대한 경계와 위상에 관한 법령 o N. 2000-025(2000.1.24.) : 법령 N.2007-022(2007.4.9.)에 의해 수정·완성된 수산법령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2006-068(2006.7.3.) : Banc d'Arguin 국립공원에 관한 법률(N. 2000-024, 2000.1.19.)에 적용 o N. 2006-073(2006.3.9.) : 어업접근권의 배분 방식에 관한 명령 o N. 2006-97(2006.2.17.) : 어업감시제 제도 o N. 2006-010(2006.8.22.) : 수산물 수출 등 상업화에 관한 명령
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1881(MPEM, 2006.8.8.) : 원양어업 허가 부여 조건에 관한 포고 o N. 3085(MPEM, 2006.12.31.) : 원양어업 허가 부여 조건에 관한 포고 o N. 2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 접근의 재정적 조건에 대한 결정

자료: CTA, 2006

세네갈 어업관련 규정 중 수산법은 1987년에 제정되고 1998년 개정된 해양어업법령집이 있으며, 행정명령 사항으로는 용선조건에 관한 사항과 해양어업 법령집의 적용과 적용방식에 관한 사항이 있다. 포고 사항으로는 굽은 단섬유와 다중섬유에 따라 제작된 그물망에 관한 포고, 해양어업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내부규칙 포고, 영세어업 허가에 관한 포고 등이 있다.

〈표 3-7〉 세네갈 어업관련 규정

구 분	세네갈
수 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87-27 : 해양어업법령집 o N. 98-32 : 해양어업법령집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 87-1600 : 용선 조건 o N. 90-970 : 해양어업 법령집의 적용 o N. 98-498 : 해양어업 법령집의 적용 방식
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굽은 단섬유와 다중섬유에 따라 제작된 그물망에 관한 포고 o N. 7228 : 해양어업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내부규칙 포고 o 영세어업 허가에 관한 포고

자료: CTA, 2006

기니의 어업관련 규정 중 수산법은 1995년 해양어업에 관한 법령이 대표적이다. 행정명령은 해양어업 명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적 어업 허가증 부과세율에 관한 사항과 영세어업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포고하고 있다.

〈표 3-8〉 기니 어업관련 규정

구 분	기니
수 산 법	o L/95/13/CTRN(1995.5.5.) : 해양어업에 관한 법령집
행정명령	o D/97/227/PRG : 해양어업 명령
포 고	o N. 0603/95/MP/A/CAB : 산업적 어업 허가증 부과세율 o N. 006/76/MP/A/SGG/2006 : 영세어업에 관한 규정

자료: CTA, 2006

3. 어업관리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업관리에 관한 조치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의 공권력은 어업관리에 규율을 정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모리타니아(2004), 기니(1995), 세네갈(1998), 모로코(2010 Dahir)는 새로운 어업관련 법령집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형 원양어종 보존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 관리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1) 해역에 대한 규정

CSRP 국가들과 모로코는 영해 12해리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82년 몬테고만 협정(Montego Bay Convention)에 근거하고 있다. CSRP 국가와 모로코의 해역 구분은 영해 12해리 이내, 확장된 수역 12해리~24해리 이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까지로 하고 있다.

〈표 3-9〉 CSRP 국가와 모로코의 해역에 관한 규정

국가	영해	확장된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모로코	12해리 (N.1-73-211, 1973. 3.2)	24해리 (Dahir N. 1-81-179, 1981.4.8.)	200해리 (N. 1-81-179, 1981.4)
모리타니아	12해리 (N.88-120, 1988.8.31.)	24해리 (N. 88-120, 1988.8.31.)	200해리 (N. 88-120, 1988.8.31.)
세네갈	12해리 (N. 85-1-4, 1985.2.25.)	24해리 (N. 85-1-4, 1985.2.25.)	200해리 (N. 98-32, 1998. 4.14)
감비아	12해리 (N. 4, 1968)	24해리 (N. 4, 1968)	200해리 (수산업, 2001)
기니	12해리 (N. 336/PRG/80, 1980.7.30.)	-	200해리 (N. 336/PRG/80, 1980.7.30.)
기니 비사우	12해리 (N. 3/85, 1985.5.17.)	-	200해리 (N. 3/85, 1985.5.17.)
카포베르테	12해리 (N. 60/IV/92, 1992.12.12.)	24해리 (N.60/IV/92, 1992.12.12.)	200해리 (N.60/IV/92, 1992.12.12.)
시에라리온	12해리 (N. 8 - 1971)	-	-

자료: CTA, 2006

2) 어업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

모로코를 포함한 CSRP 국가들의 어업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포획, 용선, 자유면허 등 3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1982년 해양권리에 대한 UN해양법 협약을 받아들였으나 어업자원을 개발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용선과 자유면허 체계는 어업협정으로서 외국어선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용선과 자유면허 체계 하에서 정하는 외국어선의 수는 이론적으로는 과잉생산능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산자원의 상태가 악화되면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중지하여야하기 때문이다.

〈표 3-10〉 소형 원양어종 접근 체계

국가	외국 어선의 용선체계	자유면허 체계
모로코	N. 1-81의 제3조(1981.4.8)	EU와의 어업협정, N. 1-81의 제13조
모리타니아	N. 2000-025의 제15조(2000.1.24)	어업협정, N.2000-025 제 13조
세네갈	해양어업 법령집 N. 98-32 (1998.4.14)의 적용양식을 정한 N. 98-498 행정명령(1998.6)	어업협정 해양어업 법령집의 N. 98-32의 행정명령(1998.4.14)
기니	N. L/95/23/CTRN(1995.6.12)	N. 0003/9/MARA/CAB 행정명령(1994.2.3)
감비아	2007년 해양어업 법령	-
시에라리온	N. 4(1988.4.29)	-
기니비사우	N. 4-96 행정명령(1996.9.2)	-

자료: CTA, 2006

감비아(2007년 해양어업 법령)와 기니(2006년 포고)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및 허가 형태의 발급이 있어야 한다. 영세어업인 또는 연안어업인도 어업자원 이용을 위해 면허와 권리를 획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SRP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어업협정을 맺고 있는데 2000년 현재 CSRP국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의 산업적 어업 형태의 어선은 1,400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업자원 이용권의 판매협정은 본질적으로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사회경제적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국과의 어업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부아프리카 CSRP 회원국들은 공동의 어업자원 접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국가 단위로 외국어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업자원 접근 제도 간 일관성이 없는데 모리타니아 법령에서는 용선체계가 상이하여 소형 원양어종 단위는 수산청의 포고에 의해 어업자원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네갈의 용선 관련 법률은 보다 엄격하나, 반대로 용선할 수 있는 단위의 어획물 적재와 하역보다는 용선기간(1년 갱신 가능)의 관점에서 보다 용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네갈과 모리타니아에서 어획물 총량의 하역 의무는 명확하지 않고, 각 용선 단위에 대해 감독관 또는 감시관(세네갈) 또는 과학적 옵서버(모리타니아)의 승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표 3-11〉 모리타니아와 세네갈의 용선 조건 비교

구 분	모리타니아		세네갈		
	두족류 트롤선	기타	참치 어선	원양 예망선	기타
용선자의 위상	국적 소유자	국적 소유자	국적 소유자	국적 소유자	국적 소유자
결정구조	-	정비계획 보유 의무 하에 수산청 행정명령	수산청에서 예외 발급증 부여	수산청에서 예외 발급증 부여	수산청에서 예외 발급증 부여
하역	어획물 전체	어획물 전체	어획물 전체	어획물 전체	어획물 전체
과학적 참관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기간	1년, 갱신 가능	1년, 갱신 가능	1년, 갱신 가능	1년, 갱신 가능	1년, 갱신 가능
승무원	간부를 제외한 승무원의 절반	간부를 제외한 승무원의 절반	간부를 제외한 승무원의 절반	간부를 제외한 승무원의 절반	간부를 제외한 승무원의 절반

자료: CTA, 2006

3)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규정

서부아프리카에서 보호해역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호 해역은 Banc d'Arguin으로서 이 면적이 6,000km²에 해당되며 생물다양성 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원양어종 어업은 해양보호구역이 시공간적으로 활발한 이동을 하는 어종들의 보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다.

〈표 3-12〉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해양보호구역 비교

보호해역	면적	지정 연도	지형학적 위치	보호 목적
MeraZerga 생물학적 보호지역	7,000ha	1978	모로코 북대서양 연안	물새를 위한 국제적 중요 습지지역 (Site Ramsar)
Khifiss 만	6,600ha	1962	모로코 북대서양 연안(Tarfaya)	물새를 위한 국제적 중요 습지지역 (Site Ramsar)
Banc d'Aguin 국립공원	12,000Km2 중 6,000Km2 해양	1976	모리타니아 대서양	Ouesds Souss와 Massa의 이비스새 보호
Diawing 국립공원	16,000ha	1991	모리타니아 Bas Delta 세네갈 강	새와 강의 어로자원 보호
Madeleine 섬 공원	2,000ha	1976	세네갈 Saint Louis 섬	유네스코 세계유산(새) 공원
Bamboung 해역	6,800ha	2003	세네갈 Sine-Saloum	새, 물고기, 해양포유동물 보호
Joal-fadiouth	17,400ha	2004	세네갈 다카에서 114Km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획자원의 개선
Popenguine 자연보존	1009ha	1986	세네갈 다카에서 남쪽으로 60Km	파괴된 서식지 복원
Kayar 해역	17,100ha	2004	세네갈 다카에서 북쪽으로 60Km	어로자원의 다양성 보존
Soloum 삼각주 국립공원	76,000ha	1976	세네갈 서부지역	삼각주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보존
Nium 국립공원	4,940ha 중 2,740ha 해양	1986	감비아 강 북쪽	동식물 가치의 유지와 개선
Tanbi 국립공원	6,000ha 중 2,000ha 해양	2008	감비아 강 남쪽	생물다양성 보존
Tanji강과 Bijol섬 보호지역	612ha	1993	대서양 해안과 감비아 강 남쪽	생물다양성 보존
Urok 보호 해역	54,000ha 중 39,800ha 해양	2005	기니 비사우 Bijagos 군도 남쪽	Urok의 자연 및 문화적 유산의 지속 보장
Orango 국립공원	158,235ha 중 132,200ha 해양	2000	기니 비사우 Bijagos 군도 남쪽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장
Joa ovieira poilao 해상 국립공원	49,500ha 중 47,943ha 해양	2000	기니 비사우 Bijagos 군도 남쪽	균형있고 기능하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존
Tristao/Alcatraz	85,000ha	2003	기니 북서쪽	생물다양성 보존

자료: CTA, 2006

4) 수산업법에 대한 규정

CSRP 지역과 모로코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 조치는 그물과 트롤망의 최소 크기, 어종의 최소 크기와 무게, 부수적 어획량에 대한 제한, 어업금지 기간, 어업의 특정 유형의 계약,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 중 소형 원양어종의 망목의 크기는 상업적 어업과 영세어업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상업적 어업의 경우 세네갈, 시에라리온, 기니와 모로코는 원양 트롤망의 크기를 각각 50mm, 60mm, 70mm로 정하고 있고, 카보베르데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40mm의 크기로 정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 국가 중 모리타니아 등 3국은 40mm 크기를 채택하고, 나머지 3국은 60-70mm의 크기를 정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망목의 크기를 막거나 실제로 그물망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트롤망 규제 및 어업도구의 필터 크기 축소 금지를 위해 최초 포획어종의 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 3-13〉 서부아프리카 원양트롤의 망목 기준

국가	모리타니아	세네갈	기니	기니비사우	감비아	시에라리온	모로코
망목	40mm	50mm	70mm	40mm	40mm	60mm	70mm

자료: 국가별 수산업법 및 규정 참고

모리타니아는 CSRP국가 중에서 영세어업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국가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작은 원양어류, 특히 정어리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나선형의 예인망에 대해 그물망 크기를 40mm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4〉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허용된 영세어업자의 망목크기

국가	모리타니아	세네갈	기니	기니비사우
나선형 예인망	40mm	28mm	25mm	28mm
치어 탈출용 그물	-	46mm	60-65mm	-

자료: 국가별 수산업법 및 규정 참고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어종별 체장 규정은 생물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영세어업인, 상업적 어업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로서 규정 크기 이하의 어류는 포획을 금지한다.

〈표 3-15〉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어종별 체장 규정

어종	모리타 니아	세네갈 (D.A 법 98/32)	세네갈 (행정명령 2009.4)	기니 비사우	카보베 르데	시에라 리온	감비아	모로코
<i>Sardinella aurita</i>	18cm	12cm	18cm	12cm	-	14cm	12cm	20cm
<i>Sardinella maderensis</i>	18cm	12cm	18cm	-	-	-	-	20cm
<i>Scomber japonicus</i>	25cm	12cm	25cm	-	18cm	-	19cm	20units/ Kg
<i>Sardina pilchardus</i>	16cm	-	15cm	-	-	-	-	40units/ Kg
<i>Trachurus sp</i>	19cm	15cm	20cm	-	-	-	-	14cm
<i>Carnax rthonchus</i>	19cm	15cm	20cm	-	-	-	-	14cm
<i>Trichiurus lepturus</i>	-	-	-	-	-	-	-	50cm
<i>Engraulis encrasicolis</i>	-	-	10cm	-	-	-	-	60units/ Kg
<i>Ethmalosa fimbriata</i>	-	-	18cm	15cm	-	17cm	15cm	-

자료: 국가별 수산업법 및 규정 참고

CSRP 국가들은 조업 가능 수역의 경계와 관련하여 공동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소형 원양어류를 포획하는 상업적 어업의 경우, 기니의 경우 50해리를 정하고 있고, 감비아는 가장 짧은 7해리를 정하고 있다. 상업적 어업의 경우 모리타니아는 13~15해리 이상에서 조업이 가능하며, 세네갈은 북부 해안에서는 20해리 이상, 카자망스 지역(Casamance)에서는 35해리 이상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제한 또는 금지된 어업유형으로는 폭약이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어업행위가 있다. 세네갈과 기니에서는 쌍끌이트롤에 의한 어업행위는 금지되며, 모리타니아와 모로코는 2010년부터 해안에서 20m 거리에서는 멸치류 어업에 대해 쌍끌이 조업을 제한하였다.

〈표 3-16〉 북서아프리카 국가의 어업 수역 경계

구 분	모리타니아	세네갈	모로코	기니	기니 비사우	감비아
상업적 어업	13~15해리 이상	북부해안에서는 20해리 이상, Casamace에서는 35해리 이상	290N 남쪽 15해리	12해리 이상	12해리 이상	7해리 이상
영세 어업	제한 없음	6해리 이하	2해리 이상	6해리 이상	6해리 이상	7해리 이하

자료: 국가별 수산업법 및 규정 참고

4. 어업규정 종합

위의 사항을 포함한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의 수산업 관련 법령은 <표 3-17>과 같다. 기니의 경우, 어업발전 및 관리 계획(2014)을 통해 라이선스별 쿼터량, 선박 수, 입어료 등을 정하고 있으며, 12해리 및 수심 20m 이상에서는 어류 및 두족류 조업, 30해리 이상에서는 새우조업, 50해리 이상에서는 원양어업 및 다랑어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라이선스의 종류는 원양, 저서류, 새우류, 두족류, 참치로 구분하며 산업형 수산업 규정상 작성된 수산업 관리 계획에 따르면 저서류, 새우류, 두족류 트롤의 경우 12마일 외측 및 수심 20미터 이상에서 조업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0~40미터가 기니 EEZ의 70%를 차지한다. 원양트롤의 경우에는 50마일 외측에서 조업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망목의 크기는 어류 및 두족류는 70mm, 새우트롤은 40mm이다. 상업적 트롤선에서 해상전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기니비사우의 경우 수산업법을 통해 외국어선은 국제조약, 어업협정, 용선계약 형태로 조업이 가능하며, 냉동어선(상업적 어업)의 경우 12해리 밖에서 냉장 설비를 갖춘 60마력 이상의 배로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선박은 입출항 시점, 위치, 어획량, 어획구성, 어로시간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허가장에는 기니비사우 영해 범위인 12해리를 지정하며, 영해 내에서의 상업적 어획을 금지하고, 세네갈, 기니비사우 양국 허가 취득 시 공동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앙골라의 수산업법(2013)은 15m 이상 선박은 어업장비와 상관없이 VMS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인망 어업 금어기간은 7월, 8월, 9월로 정해져 있다. 2013년 총허용어획량(TAC)은 32,564톤이고, 저인망 및 상업적 어업의 조업지역은 300톤 이하 선

박은 10마일 이상, 300톤~ 600톤 이상 선박은 12마일, 수심 50m 이상, 600톤 이상 선박은 해안 15마일 및 수심 50m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에라리온은 허가장 상에 명시되어 있는 Yawri Bay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조업 금지, 연안배타수역(IEZ, Inshore Exclusion Zone : 연안 5~10해리)에서의 조업금지, 매일 어획량 보고 사항 무선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역 의무량은 어류의 경우 30%, 패류는 3%로 정하고 VMS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수산업법 상으로는 IEZ에서 영세어업과(artisanal)과 전통어업(traditional)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업종류와 어종, 지역,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조업 노력량, 방법, 지역, 어획량을 기록하고, 선장 등 영어소통 및 국제신호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상 전채 전 7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수산업관리 및 발전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선박은 국제법, 협정, 허가를 통해 조업이 가능하고, 지정장소 및 지정시기에만 해상전채가 가능하다. 어획량, 선박수를 고려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을 만족할 경우, 용선 협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IEZ내에서의 산업적(Industrial), 준산업적(Semi-Industrial) 어업은 제한하고 있다. 50톤(GRT) 이상 어선과 저층트롤 어선은 연안과 50m 이하 수심에서 조업이 불가하며 저층트롤의 망목 크기는 60mm 이하 등 그물크기를 제한하고, 산란기 랍스터와 갑각류는 어획을 제한하고 있다.

가봉의 경우, 가봉-EU 수산파트너십 협정(2007) 및 부속서(2013)에 따라 조업수역은 12해리 외측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장 발급과정, 요건, 기한은 1년으로 한다. 모든 선박은 조업보고와 양륙절차를 따르고 VMS 설치, 옵서버 승선, 선원계약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7〉 서부아프리카 수산관련 법령(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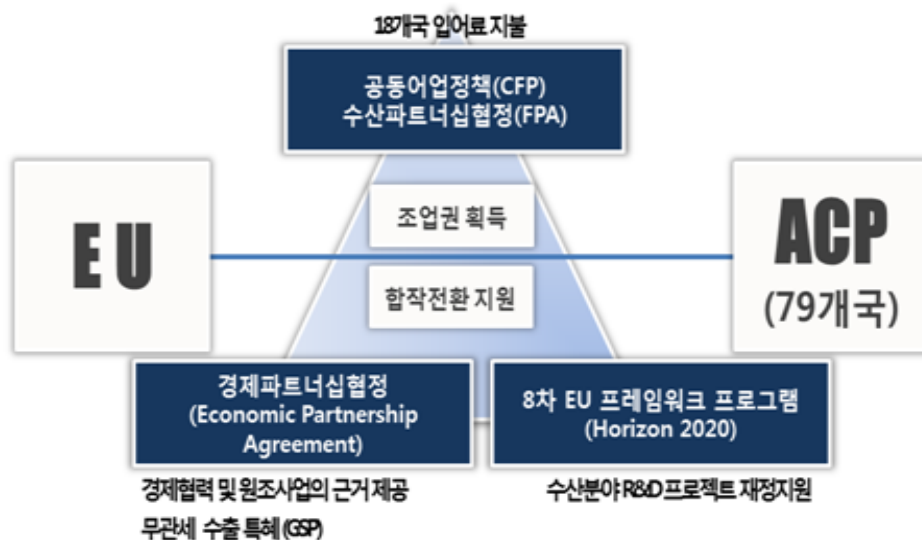
국가	수산관련 법령 내용
기니	어업발전 및 관리 계획(2014) - 라이선스별 쿼터, 선박 수, 입어료 - 12해리, 수심 20m 이상 : 어류 및 두족류 조업 - 30해리 이상 : 새우조업 - 50해리 이상 : 원양어업 및 다랑어조업
	기니 수산업법 - 라이선스 종류 : 원양, 저서, 새우, 두족류, 참치 - 산업형 수산업 규정 하위 연간 수산업 관리 계획에 따르면 저서, 새우, 두족류 트롤의 경우 12마일 외측 및 수심 20미터 이상에서 조업 가능(0~40미터가 기니 EEZ의 70%를 차지) - 원양트롤의 경우에는 50마일 외측에서 조업가능

국가	수산업 관련 법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되는 그물코 크기는 어류 및 두족류 트롤은 70mm, 새우트롤은 40mm - 산업형 트롤선에서 해상전재 금지
기니비사우	<p>수산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선의 경우 국제조약, 어업협정, 용선계약 형태로 조업 가능 - 냉동어선 어업(산업형 어업)의 경우 12해리 밖에서 냉장 설비를 갖춘 60마력 이상의 배로 조업 가능 - 입·출항시점, 위치, 어획량, 어획구성, 어로시간 보고 의무 <p>허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니비사우 영해 범위 지정 : 12해리 - 영해내에서의 산업적 어획(Industrial Fishing) 금지 - 세네갈, 기니비사우 양국 허가 취득시, 공동해역에서 조업 가능
앙골라	<p>수산업법(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m 이상 선박은 어업 장비와 상관없이 VMS 장착 - 저인망 어업 금어기간 : 7월, 8월, 9월 - 2013년 어획허용 총량(TAC) : 32,564톤 - 저인망, 산업형 어업의 조업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톤 이하 선박 : 10mile 이상 · 300톤 이상 600톤 이하 선박 : 12mile 수심 50m 이상 · 600톤 이상 선박 : 해안 15mile 수심 50m 이상
시에라리온	<p>허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awri Bay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조업금지 - 연안배타수역(IEZ, Inshore Exclusion Zone : 연안 5-10해리)에서의 조업금지 - 매일 어획량 보고를 무선으로 제출 - 하역 의무량 : 어류 30%, 패류 3% - VMS 장착 <p>수산업법(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Z에서는 영세어업(artisanal)과 전통어업(traditional)만 허용 - 가능한 조업종류와 어종, 지역, 조건 - 매일 조업 노력량, 방법, 지역, 어획량 등 기록 - 선장 등 영어소통 및 국제신호 숙지 - 해상 전재 전 72시에서 24시 사이에 보고 <p>수산업 관리 및 발전법(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협정, 허가를 통해 외국국적 선박 조업가능 - 지정 장소, 시기에만 해상 전재 가능 - 어획량, 선박수 고려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을 만족할 경우, 용선 협정 허가 - IEZ내에서의 산업적(Industrial), 반산업적(Semi-Industrial) 어업 제한 - 50톤(GRT) 이상 어선과 저층트롤 어선은 연안과 50m이하 수심에서의 조업 불가 - 저층트롤망 크기 60mm이하 등 그물크기 제한 - 산란기 랍스터와 갑각류 어획 제한
가봉	<p>가봉-EU 수산 파트너십 협정(2007), 부속서(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수역(12해리 외측) - 허가장 발급 과정, 요건, 기한(1년) - 조업보고, 양륙절차 - VMS 설치, 옵서버, 선원계약 등

제5절 EU의 진출 사례

1. 법적 제도적 근거

EU가 수산부문 양자협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는 EU 역내 국가의 수산업 가이드라인과 방향을 정하는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산파트너십협정(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18개국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EU는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 79개국과의 협정을 통해 조업권을 획득하고 합작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경제협력 및 원조사업의 근거 제공, 무관세 수출특혜(GSP)를 주고 있으며, 제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Horizon 2020)을 통해 수산분야 R&D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양자협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3-11〉 EU의 양자협정 법적·제도적 근거

2008년 ‘Cotonou협정’⁹⁾을 대체한 ‘경제파트너십협정’은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EU와 수산자원 개도국(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 국가)간에 맺은 협정으로서 서부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모리타니아 추가)의 15

9) ‘Cotonou협정’은 ACP-EU간 협정으로 2000년에 맺어져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거시경제적 균형회복, 민간부문의 발전, 사회적 서비스 개선, 환경 보호, 교역의 상호제약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 회원국을 포함한다. ‘경제파트너협정’은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제공하도록 규율을 정하고 있어 어업부문에서의 투자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02년 EU와 칠레가 맺은 ‘협력과 자유교환 협정’ 부속의 어업의정서 사례와 같이 ‘경제파트너십협정’ 맥락에서 어업부문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EU의 양자협정 현황

EU 공동어업정책(CFP)에 따른 새로운 수산파트너십협정(FPA)의 체결 방향은 지속가능성, 상대 개도국의 이익 고려, 투명성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제3국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증진하고 입어권(어획쿼터) 산정을 위한 과학적 정보·근거를 강화하여 ‘전체 어획노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협정에 따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조항 삽입하고 EU 선주의 입어로 부담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EU 어선이 연안국 어업인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¹⁰⁾ 하고, EU 어선의 어획량 일부는 해당 연안국에 양륙하여 가공할 의무를 주고 있어 2013년 체결된 EU-가봉 FPA에서 참치선망은 어획량의 30%를 가봉 항구에 하역하고, 연승선은 어획량의 100%를 가봉 항구에 의무하역 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NGO 등으로부터 EU 어업협정이 ‘과잉어획을 개도국에 수출(Exporting overfishing)’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옴에 따라 상대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현재 EU는 ACP국가 중에서 18개국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카보베르데, 코로모스,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모리타니아, 가봉,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등의 국가와 양자협정을 통해 연간 4십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수산정책개발금을 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근 EU는 모리타니아와의 어업협정을 갱신하였으며 연간 약 7천만 유로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2년 동안 EU 어선 70척의 입어를 승인받은 바 있다.

10) 2013년 체결된 EU-가봉 FPA는 EU 선박이 선박 어선원의 최소 20%를 ACP 국적 어선원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표 3-18〉 EU-아프리카 양자수산업협력 현황

국가	만료일	지불금액/연	수산업정책개발금 배정
카보베르데	2014. 8	435,000 유로	110,000 유로
코모로스	2013. 12	615,250 유로	300,000 유로
코트디부아르	2018. 6	680,000 유로	257,500유로
마다가스카르	2014. 12	1,525,000 유로	550,000 유로
세이셸	2014. 1	5,600,000 유로	40%
모리타니아	2014. 12	70,000,000유로	3,000,000유로
가봉	2016. 4	1,350,000유로	450,000유로
모잠비크	2015.1	980,000유로	460,000유로
상투메프린시페	2014. 5	682,500유로	227,500유로

자료: 유럽위원회 홈페이지

3. EU의 서부아프리카 진출

아프리카 연안국가에 원양선단이 진출하여 합작회사가 출현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아프리카의 연안 개도국들은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원양선단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합작회사를 아프리카 국가에 세운 것은 1990년이며 EU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어선을 이전하고 유럽해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하는 유럽 선주에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한편, 합작회사의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유럽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의 보조금을 받는 합작회사는 ACP 국가 가운데 20여개 국가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 EU는 i) 유럽선단의 과잉생산 축소, ii) EU 시장으로의 수산물 공급, iii) EU의 고용유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20개 ACP 국가를 대상으로 한 EU의 합작회사 전환지원은 1999년 모로코와의 양자협정 개정 실패로 기존 입어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합작을 통해 선박의 국적을 제3국으로 영구 전환시 보조금 지원 및 유럽 입어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국 승인을 받고 자원보존 규정 준수를 충족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합작전환 추진 결과 1992년부터 1999년까지 152개 합작이 진행되었으며 총 241척(트롤선 176척, 새우트롤선 32척, 선망 및 연승선 33척)이 국적을 전환하였다. EU 국가 중 가장 많이 합작 전환을 한 국가는 스

페인으로 82건 138척, 다음은 포르투갈 34건 42척이다¹¹⁾. 2006년 스페인은 합작회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유럽 수산물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7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ACP 25개국에서 총 122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370척 이상의 어선을 보유하고 활동하였다.

〈표 3-19〉 서부아프리카 국가의 유럽 합작회사와 어선의 수(2000년)

주요 서부아프리카 국가	유럽 합작회사	어선의 수
세네갈	27	41
모리타니아	8	9
기니	5	7
기니비사우	4	6
카보베르데	4	4

자료: CTA, 2006

EU는 합작의 성과로 i) EU의 선박용량은 감소한 반면, 241척 중 207척(86%)이 기존에도 제3국에서 조업하던 선박이었으므로 어획능력의 감소는 없었으며, ii) 1999년 생산량 17만 5천 톤 중 14만톤이 EU로 공급되는 등 EU 시장 수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iii) 직접고용 5,639명 중 42%가 유럽 국적을 유지하여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4. EU-기니 어업파트너십

EU는 서부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별적인 어업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나 2014년 기니를 IUU 어업국가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모든 종류의 협력관계를 단절한 상황이다. 향후 한국이 EU와 같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가 차원의 협력관계를 가지고자 한다면 EU의 어업파트너십 형태를 숙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기니간 어업파트너십 전문을 수록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의 어업파트너십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아래의 전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수산부문 협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CTA, "L'avenir des relations peche ACP-UE", 2006.

참조 1. EU-기니 어업파트너십 전문

기니공화국을 이하 기니라고 칭한다. 유럽을 이하 공동체라고 칭한다.

기니와 공동체 사이의 긴밀한 관계, 코토누협약, 둘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소망을 고려할 때, 협력을 통해 두 당사자가 어업자원을 유지 가능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소망을 고려할 때,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 관하여, 대서양 참치의 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이하 ICCAT)의 결정과 권고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에 FAO회의에서 채택된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협약에 의해 확립된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한 책임있는 어업의 도입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협력은 (함께 혹은 따로) 보완적인 계획과 조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일관적인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니정부가 채택한 어업정책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고,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주체와 민간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확인할 생각이다. 또한 기니 해안에서 공동체 선박의 어업활동을 규정할 용어와 조건을 확립할 것이며, 기니는 책임 있는 어업 도입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 양쪽 당사자로부터의 회사를 포함하는 합작회사의 설립과 개발을 통하여 수산업에서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과 그 밖의 관련된 활동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 1조 범위

이 협약은 다음의 원칙 및 법칙과 절차를 확립한다.

- 어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기니 어업부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어업부문에서의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과학적인 협력
- 공동체 어업 선박이 기니 수산업지대로의 접근을 지배하는 조건
- 위의 범규와 조건들을 통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IUU어업 방지, 기니 어장에서 어업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협력
- 어업 부문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 사이의 파트너십과 공통된 이해 안에서의 관련된 활동.

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a) 기니 정부는 어업을 책임지는 부서를 의미한다.
- (b) 공동체 정부는 유럽 위원회를 의미한다.
- (c) 기니의 어장은 기니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안을 의미한다. 이 협약으로 승인되는 공동체 선박의 수산업활동은 오직 기니 법에 의하여 수산업활동이 허가된 지역에서만 수행될 것이다.
- (d) 어선은 수산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설비된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 (e) 공동체선박은 공동체의 구성원 국기를 달고 공동체에 등록된 어업선박을 의미한다.
- (f) 합작위원회는 이 협약 10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체와 기니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 (g) 환적은 잡은 어업의 일부나 모두를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또는 항만으로 혹은 항만으로부터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 (h) 흔하지 않은 상황은 자연현상을 제외하고 당사자 중 한 쪽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하는 경우(기니해안에서 어업활동을 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 ACP 해양인은 코토누 협약에 서명한 비유럽 국가의 국적을 지닌 해양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니 해양인은 ACP해양인이다.

- (j) 감시는 the Centre National de Surveillance et de Protection des Pêches (CNSP)를 의미한다.
- (k) 대표단은 기니에 대한 유럽위원회 대표단을 의미한다.
- (l) 선박소유자는 수산업 선박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의미한다.
- (m) 수산업권한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수산업활동을 할 권리 혹은 이 협약에 따른 특정한 수산업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3조 이 협약의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과 목적

1. 당사자는 기니 어장에서 수산업을 하는 다른 선단 사이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있는 수산업을 조장하기로 한다. 호혜적인 수산업조약을 포함하여 지리적 지역 내의 개발국가들 사이의 협약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
2. 당사자는 대화의 원칙과 사전협의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한다. 특별히 부문간 어업정책의 실행과 기니 어업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정책 및 조치들의 실행에 관하여 그렇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에 기초하여 실행된 조치와 프로그램, 행동들에 대해 따로 혹은 같이 사전적, 현재적, 사후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
4. 당사자는 이로써 이 협약이 좋은 경제적 사회적 거버넌스에 따라 실행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한다. 기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자원의 상태를 보존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5. 특별히 ACP 해양인의 공동체 선박에의 고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언은 권리로서 상응하는 계약과 일반적인 고용계약에 적용된다. 이는 특별히 협회의 자유, 집단협상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와 관련된다.

4조 과학적인 협력

1. 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와 기니는 기니수산업지대에서 자원의 진화를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두 당사자는 모든 관련된 국제수산기구가 채택한 권고와 결정 그리고 가장 이용가능한 과학적 조언의 견지에서 서로에게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협정 제 10조 규정에 의해 적절한 과학적인 회의를 거친 후, 공동체 선박 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간 합의에 이르게 한다.
3. 당사자는 대서양 바다의 생물자원을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관련된 과학연구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소지역적인 범위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국제기구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서로를 상담 해주기로 한다.

5조 공동체선박을 이용한 기니해안 어업으로의 접근

1. 기니는 의정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수산업지역에서 수산업활동에 종사하려는 공동체 선박을 인가해주기로 한다.
2. 이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산업활동은 기니 지역에서 발효 중인 법과 규제에 종속된다. 기니 정부는 공동체에 관련 법률의 수정본을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조항에도 선입견이 없이, 공동체 선박은 보고된 지 한 달 이내에 어떤 수정본에도 동의하여야 한다.
3. 기니는 의정서에 있는 수산업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동체 선박은 그러한 조항을 수행해 나가는 데 책임이 있는 기니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4. 공동체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공동체 선박이 이 협약과 기니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을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조 수산업활동을 지배하는 조건 - 배타조항

1. 공동체 선박은 이 협약과 의정서 하에서 기니가 발행한 유효한 수산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기니의 수산업지대에서 수산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발효 중인 의정서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어업목록과 조사 중인 수산업활동에 관해서는, 정부 부서가 공동체 선박에 수산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의 부여는 두 당사자의 호의적인 의견에 달려있다.
3. 선박이 수산업 권한을 얻는 절차와 적용될 수수료, 선박소유자의 지불방법은 의정서 및 부속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7조 재정적 기여

1. 공동체는 의정서와 부속서에 기술된 조항과 조건에 따라서 기니에게 재정적 기부금을 수여할 것이다. 이 기부금은 두 요소에 기반할 것이다. 즉:
 - (a) 공동체 선박의 기니 해안과 어업자원への 접근, 그리고
 - (b) 책임있는 수산업과 기니 해안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이용에과 관련한 국가적 어업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
2. 1(b)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의 요소는 기니 정부와 연례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부문적인 어업정책의 맥락에서 성취되기 위하여, 의정서에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협약에 의해 확인된 목적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3. 공동체에 의해 수여된 재정적 기부금은 의정서에 따라서 매해 지불될 것이며 다음의 결과에 따라서 기부금 금액이 변화할 경우에 이 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a) 흔하지 않은 상황
 - (b) 관련된 어업량을 관리하려는 목적의 상호조약에서 언급되거나 공동체 선박에 의한 수산업기회의 감소, 이는 가장 이용가능한 과학적 조건의 기초 위에 자원의 보존과 유지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 (c) 공동체 선박에 부여된 수산업기회의 증가
 - (d) 기니에서 부문적 어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조건의 재평가
 - (e) 15조에 따른 이 협약의 종료
 - (f) 14조에 따른 이 협약의 적용의 연기

8조 경제적 주체와 민간 사회 사이의 협력의 촉진

1. 당사자는 수산업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여러 다른 조치들을 조직화하려는 견해를 가지고 서로에게 조언을 줄 것이다.
2. 당사자는 수산업기술과 장비, 유지방법 그리고 수산업제품의 가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한다.
3. 당사자는 사업과 투자의 발달에 호의적인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일함으로써 기술적, 경제적, 상업적 분야에서 그들의 기업들 사이의 관계의 촉진에 호의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당사자는 특별히 기니와 공동체의 법률에 부합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9조 행정상의 협력

어업자원의 발달과 보존 조치의 효과성을 확실히 하는 것을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는 다음을 행할 것이다.

- 그들의 선박이 이 협약과 기니 해안어업법을 지키게 하기위한 행정상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과 긴밀한 행정상의 협력을 통하여 협력한다.

10조 위원회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적용을 모니터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연합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a) 협약의 적용을 이행하는 것과 분쟁의 해결을 모니터한다.
 - (b) 어업 파트너십 협약의 기니 어업정책의 실행에의 기여를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 (c) 어업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연락 담당자를 제공한다.
 - (d)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을 제공한다.
 - (e) 수산업기회와 이에 따른 재정적 기부금을 재평가한다.
 - (f) 의정서에 따라서 수산업을 지배하는 조건을 정의한다.
 - (g) 이 협약의 9조에서 언급한 행정상의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행위들을 수정한다.
 - (h) 당사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한 행위를 한다. 이에는 IUU어업과 행정상의 협력과 관련한 행위가 포함된다.
2. 연합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기니와 공동체에서 격년제로 만난다. 의장은 모임을 주최하는 당사자가 맡을 것이다. 한 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11조 협약이 적용되는 지리적인 지역

이 협약은 한편으로 유럽공동체 조약이 발효되는 영토에 적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니영토와 기니에게 관할권이 있는 해안에 적용된다.

12조 기간

이 조약은 발효 후 4년 동안 적용될 것이다. 15조에 따라서 종료의 통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4년 동안 조용하게 갱신될 것이다.

13조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서로에게 조언을 해준다.

14조 유예

1. 이 협약의 적용은 이 협약의 조항의 적용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 한 쪽에 의하여 유예될 수 있다. 협약적용의 유예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유예가 발생하기 전 최소한 3개월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를 받고나서 다른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2. 7조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은 유예기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15조 종료

1. 이 협약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어업량의 감소, 기니 정부가 공동체의 선박에 부여한 수산업기회의 감소의 발견,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실패를 들 수가 있다.
2. 협약 종료 최소한 6개월 전에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의도를 알린다.
3. 위 2항에서 언급된 통지가 있으면 당사자는 조언을 제공할 수가 있다.
4. 7조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은 종료가 일어난 해에 비례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16조 의정서와 부속서

의정서와 부속서는 이 협약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다.

17조 국가의 법

기니 바다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 선박의 활동은 기니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다만 이 협약과 의정서, 부속서,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8조 폐지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1983년 3월 28일에 발효한 기존의 협약은 대체된다.

19조 발효

이 협약은 불가리어, 스페인어, 체코어, 덴마크어, 독일어, 에스토니아어,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헝가리어, 몰타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핀란드어, 스웨덴어로 복사본이 존재하며,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발효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로에게 협약을 위하여 내부적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날짜에 이루어진다.

참고 2. 의정서

유럽 공동체와 기니 공화국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결한 기니 해안에서의 수산업에 관한 협약에 언급된 수산업 기회와 재정적 기부금에 관한 선언

1조 적용기간과 수산업의 기회

- 2009년 1월 1일부터 4년의 기간 동안, 협약 5조에 의한 이주의 성향이 강한 물고기종(1982년 UN 협약의 부속서 1에 기재된 물고기종)에 대한 수산업의 기회는 다음과 같다.
 - 냉동참치어선: 28척
 - 외줄낚시선박: 12척
- 이 의정서가 적용되고 나서 두 번째 해부터 새우 트롤선이 수산업을 할 기회가 분기마다 800grt의 비율로 다음의 조건에 의해 해마다 주어질 것이다.
 - 새우 수산업에 대한 접근의 투명한 관리의 실행, 특히 새우에 대해 국가와 외국이 행하는 수산업 노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기니는 매해 10월 31일까지 기니 바다의 새우에 대한 수산업 노력의 요약표를 제공할 것이다.
 - 기니 바다에서의 감시, 모니터링, 조절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 자원의 상태와 과학적 조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는 수산업 노력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는 대로 해마다 발표될 것이다.

이 분야 수산업의 조건은 매해 수산업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의정서 2조에 나와 있는 수산업 기회의 증가에 비례한 매년의 추가적인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호협정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 위 1항과 2항은 이 의정서의 4조와 5조에 따라 변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 유럽 공동체 국가의 선박은 기니 수산업 지대에서 수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선박들이 이 의정서와 부속서에 따라 기니가 발행한 유효한 수산업 허가를 소지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2조 재정적 기부금 - 지불방법

- 협약 7조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은 (1조 1항에 언급된 기간에 대해) 매해 5,000톤에 해당하는 매해 325,000유로에 (기니의 부문별 수산업정책의 실행과 지원에 대한) 매해 125,000유로의 특정한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 이 특정한 금액은 협정의 7조에 규정된 하나의 재정적 기부금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

1조 2항에 따라 추가적인 수산업의 기회가 부여되면, 협정의 7조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은 1조 2항에 언급된 기간에 대하여 수산업기회의 증가에 비례하여 매해 300,000유로까지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위에 언급된 금액은 첫해의 특정한 공동체 기부금 600,000유로, 두 번째 해의 400,000유로, 그 다음 해의 300,000유로로 보충된다. 이는 기니 어장에서 모니터링과 조절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니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위성감시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부금은 이 의정서의 7조에 따라 관리될 것이다.
- 1항은 이 의정서의 4, 5, 6, 7조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 공동체는 1항의 고정된 전체 금액을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해 지불할 것이다. (즉, 첫 해 1,050,000유로, 두 번째 해 1,150,000유로, 다음 해 1,050,000유로) 이 금액은 수산업 기회에 있어서 어떠한 해로운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이 의정서의 4조와 5조에 따라 결정될 수

도 있는 새로운 수산업 기회의 창출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4. 만약에 기니 어장에서 공동체 선박의 전체적인 수확량이 기준 용적톤수를 초과하게 되면, 매해 재정적 기부금 금액이 추가적인 톤수마다 65유로만큼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에 의해 지불되는 전체 연간 금액은 3항에 규정된 금액의 두 배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첫 해 1,050,000유로, 두 번째 해 1,150,000유로, 그 다음 해 1,050,000유로, 공동체 선박에 의해 수확된 양이 전체 매해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에 지불될 것이다.
5. 1항에 규정된 재정적 기부금은 첫 해에는 2009년 11월 30일 이전에 지불될 것이고 다음 해에는 2월 1일 이전에 지불될 것이다.
6. 2조 1항 3줄의 특정한 기부금을 제외하고, 6조에 따라서 이 기금의 분배는 기니 금융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기니 정부는 기금이 어디 사용될 지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갖게 될 것이다.
7. 이 조항에 의한 지불은 기니공화국 중앙은행에 개설된 공공재무부계좌로 행해질 것이다. 세부 사항은 2조 1항 3줄에 기재된 특정한 기부금의 경우(바로 Centre National de Surveillance et de Protection des Pêches account로 지불될 것이다)를 제외하고 부서에 의하여 매해, 그리고 두 당사자에 의한 이 기금 프로그램의 채택 이후 첫 해에 통지될 것이다.

3조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협력 - 과학적인 협력

1. 당사자는 이로써 기니 바다에서 책임있는 수산업을 촉진하기로 한다. 이는 그 바다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선단들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 위에서 그러하다.
2. 이 의정서에서 다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와 기니 정부는 기니 어장에서 자원의 진화를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3. 당사자는 소지역적인 단계에서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한다. 특히, ICCAT와 다른 소지역적 기구 혹은 관련된 국제기구의 범위 안에서 그러하다.
4. 협정의 4조와 가장 이용가능한 과학적 조언에 따라서, 당사자는 서로에게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협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수준에서 적절한 과학적인 회의를 거친 후, 상호합의에 따라 공동체 선박 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ICCAT에서 채택된 권고와 결정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4조 상호협정에 의한 수산업기회의 검토

1. 1조에 언급된 수산업 기회는 상호협정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 단 3조 4항에 언급된 과학적 모임의 결론이 그러한 증가가 기니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줄 때 그러하다. 이 경우에 2조 1항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은 비례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2. 반대로, 당사자가 1조에 언급된 수산업 기회를 감소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재정적 기부금은 비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3. 다른 종류의 선박들 사이에 수산업 기회를 분배하는 것은 조언의 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상호협약 이후 검토될 수 있다. 단 이 의정서의 3조 4항에 언급된 과학적 모임이 권고한 사항에 그러한 변화가 부합할 경우에 그러하다. 당사자는 그에 따른 재정적 기부금의 조정에 동의할 것이다.

5조 다른 수산업 기회

1. 만약에 공동체가 1조에 규정되지 않은 수산업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활동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하여 기니와 상의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에, 당사자는 이러한 새로운 수산업 기회에 적용 가능한 조건에 대해 동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의정서와 부록에 수정을 가할 것이다.

2. 당사자는 연합 수산업 탐사조사를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의정서 3조 4항에 언급된 과학적 모임의 견해에 종속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당사자 한쪽이 관련된 새 자원, 조건, 다른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결정할 때마다 협의를 할 것이다.
3. 두 당사자는 상호협약에 의해 채택된 과학적, 행정적, 재정적 지표에 따라서 수산탐사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탐사활동의 인가는 두 당사자의 협약이 결정한 날짜로부터 최대 두 번의 6개월 간의 기간 동안에 시험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4. 당사자가 탐사적인 조사가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아있는 해양 자원을 보존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산업 기회가 의정서의 만료기간까지 이 의정서의 4조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공동체의 선박에 부여될 수 있다.

6조 흔하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의 유예와 검토

1. 자연현상을 제외하고 흔하지 않은 상황이 기니의 배타적 경제지역 (EEZ)에서 수산업 활동을 막는 경우에, 유럽 공동체는 이 의정서 2조 1항에 규정된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다.
2. 1항에 규정된 경우의 유예결정은 두 당사자 사이의 협의 후 당사자 한 쪽의 요구가 있는 후 2개월 안에 취해질 것이다. 이는 공동체가 유예시에 예정된 금액을 모두 지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3.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은 당사자가 협의가 있는 후의 상호협약에 의해 수산업을 막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확인하거나 상황이 수산업활동의 재개를 허용하는 경우에 재개될 것이다.
4. 공동체 선박에 인가된 수산업 권한의 유효성이 재정적 기부금의 지불과 함께 유예된 경우에, 그것은 수산업 활동이 유예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다.

7조 기니 바다에서 책임있는 수산업의 촉진

1. 이 의정서의 2조 1항에 규정된 재정적 기부금과 특정한 기부금의 전체금액은 매해 기니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두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 수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계획의 지원과 실행에 분배될 것이다.
기니는 목표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현재 기니 어업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견해를 갖고,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해당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자원관리를 위한 통제 및 경찰과 관련해서는 수산물의 상태, 위생 개선 및 감독 관청의 검사능력을 강화한다.
2. 이 의정서가 된 후 3개월 안에 공동체와 기니는 수 년에 걸친 프로그램과 다음을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절차법에 대하여 동의할 것이다.
 - (a) 위 1항에 언급된 재정적 기부금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데 대한 매해의 그리고 수 년에 걸친 가이드라인
 - (b) 매해의 그리고 수 년에 걸친 목표들. 이 목표들은 책임있는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장기간에 걸쳐 촉진하고자하는 견해를 가지고 달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수산업정책과 다른 정책에서 기니정부에 의해 제시된 우선점을 고려한다.
 - (c) 매해 얻어진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들
3. 하지만 두 당사자는 수산업 모니터링과 조절, 감시에 대한 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는 기니 바다에 대한 감시와 위성감시시스템과 법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수정본은 연합위원회 내의 양 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5. 매해, 기니는 수년 에 걸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1항에 언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몫을 분배할 것이다. 의정서 적용의 첫해에는 그 분배는 가능한 빨리 공동체에 통지가 될 것이다. 그 이후 매년, 기니는 공동체에 분배에 대하여 통지를 할 것인데 이는 지난 해 1월 31일 이전에 할 것이다.
6. EC와 기니는 다년간의 부문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매년 공동으로 그 진행 사항을 점

검하고, EC는 프로토콜 상의 2조 1항에 언급된 재정기여의 범위 내에서 기니의 부문별 수산정책의 지원과 이행을 위해 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실제 재정규모를 적절히 할당하기 위한 것이다.(EN L 156/4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9.6.2009에 게시)

7. 공동체는 이 의정서 2조 1항 3줄에 언급된 특정한 기부금의 지불을 유예할 권리를 가진다.

8조 분쟁 - 의정서의 적용의 유예

1. 이 의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분쟁은 협약 10조에 언급된 연합 위원회 안의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주제가 된다.
2. 의정서의 적용은, 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1항의 연합위원회 내에서 열린 협의가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한 당사자에 의하여 유예될 수 있다.
3. 의정서 적용의 유예는 이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유예가 발생하기 전 최소한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4. 유예가 일어난 경우에, 당사자는 분쟁에 우호적인 해결을 찾으려고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우호적으로 해결되자마자 의정서의 적용이 재개될 것이며 재정적 기부금이 의정서의 적용이 유예된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이다.

9조 미지불에 근거한 의정서 적용의 유예

6조에 따라서, 만약 공동체가 2조에 언급된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의정서의 적용은 다음 조건에 따라서 유예될 수도 있다.

- (a) 기니 정부는 유럽 위원회에 미지불을 통지할 것이다. 유럽 위원회는 적절한 확인을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할 것이다.
- (b)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지불이 의정서 2조 5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 기니 정부는 의정서의 적용을 유예할 권리를 가진다. 기니정부는 유럽 위원회에 그러한 행위를 곧 통지할 것이다.
- (c) 의정서의 적용은 관련된 지불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개될 것이다.

10조 국가적 법

기니 바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선박의 활동은 기니에 적용가능한 법에 의하여 규제될 것이다. 하지만 협정, 이 의정서 그리고 부속서와 부록에 다르게 언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 검토 조항

1. 이 의정서의 결론에 이르는 정책 지침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는 수정할 의도를 가지고 조항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 그 당사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 의정서의 검토를 할 의도를 통지할 것이다.
3. 통지를 한 후 60일 이내에, 두 당사자는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조항의 검토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14조에 따라서 의정서를 종료할 수 있다.

12조 폐지

이 의정서와 부속서는 현재의 수산업 의정서와 기니 해안에서의 수산업에 관한 유럽 경제 공동체와 기니 사이의 협약을 폐지하고 대체한다.

13조 지속 기간

이 의정서와 부속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적용될 것이다. 다만 14조에 따라 종료의 통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조 통지

의정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관련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종료의 일어난기 최소 6개월 전에 종료한다고 통지한다.

15조 발효

1. 이 의정서와 부속서는 당사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절차를 마쳤음을 통지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참고 3. 부속서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공동체 선박에 의한 참치조업을 규제하는 조건들

1장 수산업 인가의 적용과 이슈의 형식적 절차

1부 수산업 인가

1. 오직 적격의 선박만이 기니 어장에서 수산업을 할 권한을 얻는다.
2. 적격의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선주, 선장 그리고 선박이 기니에서 수산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선주, 선장 그리고 선박은 그들이 기니에서 수산업 활동을 하면서 지니게 되는 모든 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기니 정부와 관련하여 적법해야 한다.
3. 공동체 정부는 기니에서 수산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 유효기간 시작 최소 30일 전에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지원서는 부속서 1의 견본과 같이 작성된 형태로 수산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 제출될 것이다. 기니 정부는 제출된 자료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 자료들은 수산업 협정의 실행의 맥락에서 배타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5. 모든 수산업 인가 지원서는 다음 문서와 같이 제출될 것이다.
 - 수산업 인가 유효기간 동안 고정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
 - 이 의정서에 따른 특정한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문서나 증명서
6. 수수료는 의정서 2조 7항에 따라 기니 정부가 특정한 계좌로 지불될 것이다.
7. 수수료는 모든 국가적 지방적 요금을 포함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8. 모든 선박에 대한 수산업 인가는 위 5항에 언급된 모든 문서를 받고나서 15일 이내에 유럽위원회 대표단을 통하여 선주나 선주의 대리인에게 발행된다.
9. 수산업 인가는 주어진 선박에 대해서만 발행될 것이며 양도할 수가 없다.
10. 하지만 유럽 공동체의 요구가 있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에, 선박의 수산업 인가는 같은 종류의 다른 선박에 대하여 수수료를 더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수산업 인가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가적인 지불이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확고를 계산할 때에는 두 선박의 총 수확고를 고려한다.
11. 인가를 양도한 선박의 주인 혹은 대리인은 취소된 수산업 인가를 유럽 위원회 대표단을 통하여 수산업을 맡고 있는 기니의 정부부서에 돌려준다.
12. 새로운 수산업 인가는 선주가 취소된 수산업 인가를 기니 정부에 돌려준 날에 효력을 발휘한다. 유럽 위원회 대표단은 수산업 인가의 양도를 통지받을 것이다.
13. 수산업 인가는 항상 선박에 소지해야 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수산업 인가를 받은 선박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 목록은 기니 정부에 가능한 빨리 통지될 것이다. 목록을 받으면 그 선박은 기니 정부에 의하여 수산업을 인가받은 선박의 목록에 기재될 것이며, 이는 수산업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에게 통지될 것이다. 이 경우에, 목록의 복사본이 선주에게 보내질 것이며 인가가 발행될 때까지 대신하여 선상에 걸려있을 것이다.
14. 두 당사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산업 인가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려는 데 동의를 구할 것이다. 두 당사자는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수산업을 할 권한을 가진 선박의 목록과 같이 전자적인 수산업 인가로서 종이 기반의 수산업 인가를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15. 연합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는 모든 표시를 grt로 교체하기로 한다. 이 교체는 당사자 사이에 기술적 협력이 있는 다음에 이루어진다.

2부

1장 수산업 인가 조건 - 수수료와 선지불

1. 수산업 인가는 1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갱신은 가능하다.
2. 참치어선의 경우에 톤 당 수수료는 35유로이다. 외줄낚시선박은 25유로이다.
3. 다음의 표준금액이 국가 정부에 지불되면 수산업 인가가 발행된다.
 - 참치어선 한 대 당 4,025유로, 연간 115톤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동일함
 - 외줄낚시선박 한 대 당 500유로, 연간 20톤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동일함
4. 구성원 국가들은 매해 6월 15일 이전에 유럽위원회에 지난해에 잡힌 총톤수를 보고한다. 그 총톤수는 아래 5항에 언급된 과학협회에 의해 확인된다.
5. 연간 최종 수수료는 늦어도 다음해 7월 31일까지 유럽위원회에 의해 산출될 것이다. 이는 선주가 공표한 수확량에 기초하며 이 수확량은 과학협회가 확인한다. 수수료 선언문은 유럽위원회 대표단에 의하여 보내진다.
6. 이 선언문은 동시에 기니에서 수산업을 맡고 있는 정부부서에 보내질 것이며 선주에게도 보내진다.
7. 추가적인 지불금(참치어선의 경우 115톤 초과분, 외줄낚시선박의 경우 20톤 초과분)은 선주에 의하여 다음해 8월 31일까지 기니 정부의 계좌에 지불될 것이다. 참치어선의 경우 톤 당 35유로이며 외줄낚시선박의 경우 25유로이다.
8. 하지만 최종선언문의 양이 이 부 3항에 언급된 것보다 적으면, 남은 양은 환불할 수가 없다.

2장 수산업지역

공동체 선박은 수산업 활동을 기준 선에서 12 마일 너머 바다까지 할 수 있다. 참치어선과 외줄낚시선박의 경우에는 등심선에서 20미터 너머까지 가능하다.

3장 수산업 보고

1.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공동체 선박의 항해기간은 다음과 같다.
 - 기니 수산업 지역에 선박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의 기간, 혹은
 - 기니 수산업 지역에 선박이 들어간 후 환적하거나 기니에 착륙하는 사이의 기간
2. 협약에 의하여 기니 바다에서 수산업을 할 권한을 가진 모든 선박은 기니 정부 부서에 그들이 잡은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잡은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과학협회에 의하여 입증될 것이다. 잡은 것은 다음과 같이 통지될 것이다.
 - 2.1. 수산업 인가의 연간 유효기간 동안에 매 항해에서 선박이 잡은 것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의 선언은 물질적 매체를 통해서 그 기간의 마지막에 행해진 항해 이후 45일 이내에 정부부서에 전송될 것이다. 이러한 통지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 2.2. 선박은 항해일지의 문서에 어획을 선언할 것이다. 선박이 기니 수산업 지역에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기니 수산업 지역의 바깥에서'라는 문구가 항해일지에 기록될 것이다.
 - 2.3. 그 문서는 읽기 쉽게 작성될 것이며 선장 혹은 그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될 것이다.
 - 2.4. 어획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어획에 대한 선언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에 선언된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기니 정부는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수산업 인가를 유예하고 선주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럽위원회와 기국은 통보받을 것이다.
4. 두 당사자는 위에 기술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전자적 교환에 기초한 어획보고시스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장 환적과 양륙

당사자는 기니 항구에서 양륙과 환적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다.

1. 양륙

기니항구에 양륙시키려는 공동체의 참치어선은 기니 해역에서 어획한 톤 당 5유로의 감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획한 수산물을 기니 가공공장에 팔면 추가적인 5유로의 감액이 주어진다. 이는 최종 어획된 것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공동체의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양륙되거나 환적된 톤수를 확인하는 세부법률이 위원회의 첫 모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3. 평가

재정적 인센티브의 수준과 최종어어획물의 최대 퍼센티지가 연합위원회에서 양륙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따라서 조정될 것이다.

5장 선원의 승선

1. 선주는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참치잡이 시즌에 대비해 기니 선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ACP 출신의 선원을 최소한 20퍼센트 고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주는 기니에 의해서 이 부속서 1장 1부의 수산업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2. 선주는 추가적인 기니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장에서의 근본적인 원리와 권리에 관한 선언은 공동체 선박에 등록된 선원의 권리로서 적용될 것이다. 이는 특별히 협회의 자유, 집단협상에 대한 권리의 인식,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의 제거와 관련되어 있다.

4. ACP선원의 고용계약은 선주의 대리인과 선원 혹은 선원의 노동조합이나 대리인 사이에 작성될 것이다. 이 계약서들의 복사본은 사인한 당사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계약서들은 선원에게 생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것이다.

5. ACP선원들의 임금은 선주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임금은 선주와 선원 사이의 상호조약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ACP선원의 임금조건은 그들 국가 선원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ILO기준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유럽공동체와 제 3국가 사이의 수산업파트너십협정 하에 냉동참치어선에 등록된 비공동체 선원에 대해 보장된 총임금은 해양노동협회 하의 상선에 적용가능한 ILO의 기본최저임금과 같을 것이다. 이 보장된 임금은 노동 계약서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수산업 부문과 관련된 협회가 해양노동협회보다 더 나은 수준의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권리를 정한다면 이것이 적용될 것이다.

6. 고용된 모든 선원은 공동체선박의 선상에서 그들의 승선날짜 전에 지정된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선원이 승선하기로 되어있는 날짜와 시간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주는 선원을 승선시키기로 하는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6장 기술적인 조치

선박은 수산업 장비와 기술적 사양과 관련된 ICCAT의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한다.

7장 검색관

1. 협약에 의해 기니 바다에서 수산업 인가를 받은 선박은 아래의 조건 하에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지정된 검색관을 승선시키기로 한다.

1.1.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공동체 선박은 기니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자를 승선시킨다.

1.2. 정부는 검색관을 승선시키기로 되어 있는 선박의 목록과 지정된 검색관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들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목록들은 작성되는 대로, 그리고 업데이트 되고나서 3개월 마다 유럽위원회에 보내질 것이다.

- 1.3. 정부는 수산업허가가 발행되었을 때 또는 검색관의 승선일 15일 전에 선주 혹은 선주의 대리인에게 승선하기로 지정된 검색관의 이름을 통보해야 한다.
2. 검색관이 선상에서 보낸 시간은 일종의 수산업 여행(단어 선택)이다. 하지만 기니 정부의 급한 요청이 있으면, 이 승선은 특정한 선박의 평균 여행 시간에 따라서 여러 여행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 요청은 승선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검색관의 이름이 통지되었을 때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3. 검색관이 승선하기로 되어있는 조건은 선주와 정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4. 검색관은 지정된 선박목록의 통지가 있는 후에 기니 바다에서의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될 때 선주에 의해 선택된 항구에서 승선할 것이다.
5. 2주 안에 그리고 10일의 통지기간을 주면서, 선주는 소지역의 어느 항구에서 그리고 어느 날짜에 그들이 검색관을 승선시키고자 하는지 알려야 한다.
6. 검색관이 소지역의 바깥 국가에서 승선하게 되면, 그들의 여행경비는 선주가 감당할 것이다. 지역검색관이 승선해 있는 선박이 지역 수산업 지대를 떠나게 되면, 선주의 경비부담 하에 가능한 빨리 검색관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7. 만약에 검색관이 동의된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거나 동의된 시간에서 12시간을 지나게 되면 선주는 자동적으로 검색관을 승선시킬 의무에서 면제되게 된다.
8. 검색관은 경찰관처럼 대우된다. 선박이 기니 바다에 있을 경우에, 그들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8.1. 선박의 수산업 활동을 관찰한다.
 - 8.2. 수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다.
 - 8.3. 과학적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생물학적 샘플추출을 한다.
 - 8.4. 사용된 수산업 장비를 통지한다.
 - 8.5. 등록증에 기록된 어종에 대해 기니 바다에서 잡은 것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 8.6.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의 비율을 확인하고 시장성이 있는 어종이 버려지는 양을 평가한다.
 - 8.7.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정부에 어획물과 선상의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의 양을 포함한 수산물 데이터를 보고한다.
9. 선장은 검색관이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검색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10. 검색관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 받을 것이다. 선장은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배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 필요한 선박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1. 승선 중에 검색관은 다음을 행할 것이다.
 - 11.1. 그들의 승선과 존재가 수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1.2. 선상의 물질과 재료 그리고 선박에 속한 모든 문서의 기밀을 존중한다.
12. 관찰기간의 끝에 선박을 떠나기 전에, 검색관은 유럽위원회로의 복사본과 함께 정부에 전송하기 위하여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들은 선장의 참석 하에 활동보고서에 사인을 하며 선장은 적절한 관찰을 사인으로 추가 할 수가 있다. 과학적 검색관이 상륙하면 보고서의 복사본이 선장에게 건네질 것이다.
13. 선주는 검색관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4. 검색관의 봉급과 사회보험금은 수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에 의해 지불된다. 선주는 검색관이 선상에서 보낸 일수마다 15유로를 지불한다.
15. 두 당사자는 가능한 빨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제 3자에게 지역 검색관 시스템의 정의와 지역 수산업 기관의 선택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 검색관 시스템의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 협약 아래 기니의 수산업 지대에서 수산업을 하기로 인가를 받은 선박은 지역검색관 대신에 위에 나열된 규칙에 따라서 기니 정부에 의해 지정된 검색관을 승선시킬 것이다.

8장 조절

1. 이 부속서 1장 1부 13줄에 따라서 유럽공동체는 이 의정서 아래 수산업 인가가 발행 된 선박의 최신 목록 초안을 보관할 것이다. 이 목록은 초안이 작성되자마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수산업을 담당하는 기니 정부에게 통지가 될 것이다.
2. 이 초안목록과 선지불의 통지를 받으면, 선박은 기니 정부에 의해 수산업 인가를 받은 선박의 목록에 등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은 수산업을 담당하는 정부에게 보내질 것이다. 이 경우에, 이 목록의 복사본이 선주에게 제공될 것이며 수산업 인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대신하여 선상에 걸려있어야 한다.
3. 해역 입출항
 - 3.1. 최소한 3시간 전에 공동체 선박은 기니 정부에게 기니 수산업 지역에 출입하고자하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그들은 선상의 전체적인 수량과 종을 공표하여야 한다.
 - 3.2. 출항을 통지할 때, 선박은 위치를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가능하면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어야 하며 팩스나 이메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라디오로 전달되어야 한다.
 - 3.3. 기니정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수산업활동을 하는 선박은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3.4. 선박은 수산업 인가가 발행될 때, 팩스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주소를 통지받을 것이다.
4. 조절 절차
 - 4.1. 기니 바다에서 수산업활동을 하는 공동체 수산업선박의 선장은 기니 사무관이 배에 승선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
 - 4.2. 이 사무관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이상 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 4.3. 조사와 조절이 완료되면, 선박의 선장에게 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다.
5. 위성 조절

이 협약 하에 수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선박은 부속서 2에 따라 위성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들은 기니 정부가 유럽공동체 대표단에 기니국가감시센터의 감시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하고나서 10일 후에 발효 될 것이다.
6. 승선
 - 6.1. 기니 정부는 36시간 안에 기국과 유럽위원회에 모든 승선과 벌금에 대해 통지를 할 것이다.
 - 6.2. 기국과 유럽위원회는 동시에 승선에 이르게 된 상황과 이유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받을 것이다.
7. 승선의 선언
 - 7.1. 기니 정부가 선언을 작성한 후에, 선박의 선장이 사인할 것이다.
 - 7.2. 이 사인은 선장의 권리와 모함에 대한 방어 권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선장이 문서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특정할 것이며 조사관은 “사인을 거부함”을 써놓을 수 있다.
 - 7.3. 선장은 선박을 기니정부에 의해 지정된 항구에 가져다 놓을 것이다. 사소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기니 정부는 선박이 계속 수산업을 하게끔 인가할 수 있다.
8. 승선의 경우 협의 모임
 - 8.1. 증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고려되거나 화물이나 선박 장비에 대한 행위가 고려되기 전에, 위 정보를 받고나서 하루 이내에 구성원 국가들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 모임이 유럽위원회와 기니정부 사이에 개최될 것이다.
 - 8.2. 모임에서 당사자는 조사결과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관련된 문서나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선주나 그 대리인은 모임의 결과와 승선에 기인한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것이다.

9. 승선의 해결

- 9.1. 사법절차에 이르기 전에, 추정된 위반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승선 후 3일 이내에 끝날 것이다.
- 9.2. 우호적인 해결이 있는 경우에, 벌금액은 기니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9.3. 우호적인 해결에 의해 케이스가 해결되지 않고 사법당국에 제출되는 경우에 승선비용과 벌금, 보상비용을 고려한 은행증권이 선주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지불은 기니정부가 특정한 계좌로 들어간다.
- 9.4. 은행증권은 법적인 절차가 결론날 때까지 변경될 수가 없다. 법적인 절차가 유죄판결이 없이 끝나면 은행증권이 양도될 것이다. 비슷하게, 증권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이 확정되면, 남은 금액이 양도될 것이다.
- 9.5. 다음의 경우에 선박이 넘겨지면 선원들은 항구를 떠날 인가를 얻게 된다.
 - 우호적인 해결로 발생한 의무가 충족되었을 때
 - 위 9.3에 언급된 은행증권이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니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10. 환적

- 10.1. 기니 바다에서 잡은 것을 환적 하고자 하는 모든 공동체 선박은 기니 항구 근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 10.2. 그러한 선박의 주인은 다음 정보를 기니 정부에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다.
 - 환적하는 수산업 선박의 이름
 - 이름, IMO번호 그리고 화물선박의 깃발
 - 종별 환적할 톤수
 - 환적할 날과 장소
- 10.3. 환적은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의 탈출로 간주될 것이다. 선박의 선장들은 수산업을 계속 하고자 하건 기니 수산업 지대를 떠나고자 하건, 기니정부와 주에 그들이 잡은 것을 선언해야만 한다.
- 10.4. 위에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어획한 경우, 이에 대한 환적은 기니 수산업 지역에서 금지될 것이다.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기니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11. 기니 항구에서 상륙과 환적을 하고 있는 공동체 수산업 선박의 선장은 기니 조사관에 의한 그러한 활동을 허용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 조사가 항구에서 끝나게 되면, 증명서가 선박의 선장에게 발행될 것이다.

제4장 대서양트롤 유지 존속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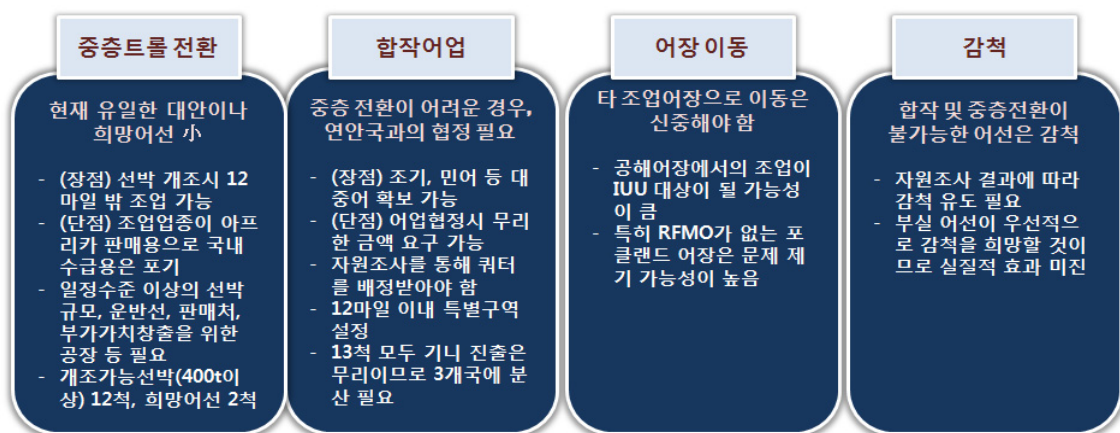
제3절 추진 전략

제4장 대서양트롤 유지 존속 방안

제1절 개요

한국 국적선의 대서양 트롤어업은 민어, 조기, 서대 등을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연안국의 허가규정인 12해리 외측 조업만 가능하다. 어군 특성상 12마일 연안 깊숙이 이동하여 경계 월경하는 등 불법조업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어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적선이 동 해역에서 조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생산되는 조기, 민어 등의 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난해 대서양 출어업계의 IUU어업 대책 방안 건의(2013년 5월 30일) 내용을 토대로 업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대서양트롤어업의 유지존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서양 출어업계는 자체 의견 조사를 통해 i)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과의 합작입어, ii) 대서양 트롤어업 구조조정(감척), iii) 12해리 밖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층트롤 조업, iv) 인도양, 포클랜드 어장으로의 전환 등을 건의하였다. 대서양 트롤어업계가 연안국가와의 합작을 희망하는 어선은 13척, 구조조정(감척) 희망 어선은 24척, 중층트롤로의 전환 희망 어선은 2척, 어장이동 희망어선은 2척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계가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1〉 대서양 유지 존속을 위한 기본 방향

제2절 기본 방향

우리 국적선의 서부아프리카 트롤어업은 우리나라 제수용품의 안정성과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물론 동 해역에서 아프리카 어업인(카누조업선)들이 직접 잡아서 육상동결과정을 통해 한국의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수산물도 있다. 그러나 육상 동결 과정에서의 선도 하락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적선 사들이 직접 어획한 원양산 수산물은 선도가 높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동 해역에서의 조업은 수출용 수산물 생산이 아닌 국내 수급용 수산물 생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부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제수용 어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원양수산물 중 북양에서 생산되는 명태 다음으로 국내 수산물 수급에 중요한 어종들이다. 이는 국내 원양 수산물 생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참치와 오징어가 주력 수출 어종이라는 점에서 동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차이가 있다.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어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유지존속 방안은 업종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중층트롤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갈치, 복 등 몇 개의 국내 수급용 어종을 제외하고 정어리, 전갱이 등 톤 당 1천불 이하의 유럽 시장 또는 아프리카 판매용 수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경영수지를 맞추는 개념이다. 또한 중층트롤로 업종을 변경하든지 현지 어선을 구조조정 한다는 의미는 국내 수급을 위한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형태의 수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합작어업은 해당 연안국 직접 투자를 통해 연안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12해리 이내에서 외국인, 내국인의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연안국의 법으로는 기존의 민어 등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프리카 연안국의 법은 무동력 카누어선 조업을 하는 연안 어업인과 연안 지역민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연안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연안 어업인과 지역민의 생계유지와 자원보전 노력이 수반된다면 합작어업 또는 국적선으로 아프리카 12해리 이내에서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아프리카 연안국가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조업의 정도가 다양한 환경단체 및 동 해역에서의 IUU어업을 감시하는 EU

등이 한국의 정책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나라 원양산업 정책의 변화, 수산물 수급의 측면, 아프리카 연안국과의 관계, 수많은 NGO 단체와 IUU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추진 전략

1. 자원관리형 원양어업을 위한 감척사업 추진

1) 감척 목적

최근 시행된 원양어업 감척사업은 포클랜드 수역의 수온 상승과 해류 정체 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어장 폐쇄에 따른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이다. 당시 감척지원금은 3년간 해당 평균 수익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감척 사업자가 해당 어선을 제 3국으로 직접 수출 또는 타 어선으로 대체 처분하였다. 이때 해당 5억 원의 특별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해당 약 4억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포클랜드의 감척 사례를 적용하여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업에 대한 감척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서부아프리카 어장이 40년 이상 동일한 조업방식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되어 왔고, UN 해양법협약 협약 체결 및 아프리카 연안 개도국의 영해 개념에 입각한 법 정비 등을 거치면서 서부아프리카 어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므로 어장폐쇄에 따른 포클랜드 어장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현실상 IUU어업 등 불법어업을 이유로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명분상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같이 감척사업에서 주의할 점은 자원에 기반을 둔 자원관리의 목적으로 감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IUU어업에 대한 통제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중서부태평양, 공해(특히 지역수산기구(RFMOs)가 없는 공해어장인 포클랜드 어장)¹²⁾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불법어업에 대한 제

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영해가 아니더라도 자원관리를 하면서 조업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IUU어업 통제법의 확대에 대비하여 서부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포클랜드 해역의 트롤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 뉴질랜드 트롤어업 등에 대해서도 자원상태에 입각한 적정 규모의 감척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대서양의 서부아프리카 해역과 포클랜드 해역, 뉴질랜드 해역은 구분되어 있지만 조업어장 폐쇄 시 이동 조업이 가능하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조업 중인 오징어채낚기 32척, 해외트롤 73척 등 총 105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감척사업은 적정 수준의 감척을 통해 잔존 어선들이 현 어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원관리형 어업 및 합작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해외 수역에서 적정 수준의 감척 없이는 연안국에서 자원관리형 및 합작 조업이 불가능하여 중국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다.

2) 감척 방향

서부아프리카 대서양트롤어업 감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트롤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업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역별 감척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외어장의 자원상태를 고려한 감척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부아프리카 해역은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 3개 국가에서의 합작입어 가능성을 두고 있으므로 자원조사 이후 입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어선¹³⁾을 산정한 뒤 나머지는 감척하는 방법이다. 포클랜드 해역에 대해서도 포클랜드 오징어채낚기, 트롤어업, 뉴질랜드 트롤어업에 대해서 先자원조사, 後감척을 추진한다. 현재 포클랜드(EEZ 조업 및 41해구 포함)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32척이며 트롤어선은 7척, 뉴질랜드 트롤(어장 이동 희망 선박) 10척이다. 감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장기 계류 중인 어선을 배제시켜야 한다. 따라서 감척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어구의 잔존가치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12) 최근 FAO는 공해(ABNJ,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에 대한 자원관리어업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13) 현재 업계가 판단하는 합작입어 가능 어선은 13척 정도이며,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

3) 감척 지원금

최근 대서양 트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척 지원금 산정시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폐업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30~40년 선령의 어선으로는 잔존가치가 없으며, 현재 어선에 탑재된 어구와 어선 수리비 정도만 잔존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척 대상 어선들이 감척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국적선의 대서양트롤 어선의 실거래 가격이 4억 5천만 원~5억 원¹⁴⁾ 수준이므로 이전 오징어 채낚기 감척 시 기준금액(약 4억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감척어선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기구의 감시·통제가 강화되어 국적선 여부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의 국적도 중요시 여기므로 어선 처분 이행을 위해서는 스크랩 등 처분이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 철저한 처분이행 감독 없이 오징어채낚기 사례와 같이 감척사업자가 해당 어선 등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타 어선으로 대체 처분하되, 당해 어선에 허가된 어업은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어선의 편법 이용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집행 근거

해외어장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감척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법,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연근해 감척 근거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개별법 마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원양산업발전법에 준용규정 마련시 연근해어업 감척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므로 실제 감척을 통한 폐업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한계는 있다.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은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IUU어업으로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들에 대한 감척을 추진할 시에는 감척근거 마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간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상실의 이유로 감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국제규제) 감척은 적용이 어려우며, 연근해어업과 같이 자원관리를 위한 감척이 아니므로 일반 감척에 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14) 라스팔마스 업계 현지 조사 결과(2013.11)

다음은 법 근거 마련을 위한 4가지 안이다.

- i)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ii) 「원양산업발전법」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부분에 근거규정 마련 등 개정
- iii)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원양어업 포함
- iv) 「원양산업발전법」에 연근해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마련

2.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략

기니는 서부아프리카에 진출해있는 대서양트롤업계가 가장 희망하는 국가이므로 기니의 현 상황을 토대로 한 합작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기니 현황

기니는 헌정사상 최초로 투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이에 맞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정국 쇄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니는 해외 국적선사와 합작사를 통한 경제 기여가 크므로 권력구조 변화로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수산업과 관련된 기니의 가장 큰 이슈는 EU에 의해 비협력적 제3국으로 최종 지정되었으며,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EU 협상단 방문을 통해 EU는 기니 정부에 강력한 IUU 통제 요구 및 인센티브 제공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EU 이외의 국가와의 협력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기니 관련법

기니의 수산관련법은 기니의 수산업법, 조업구역법(해도)에 의한 조업금지 구역 설정, EU의 IUU법을 전격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국적선의 조업 범위는 조업 구역법에 따라 적용되며, 12해리 외측 및 수심 24m 이상에서만 조업이 가능하고, 그물의 망목은 70mm로 제한하고 있다. 2014년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우리 국적선 중 일부가 행하는 모선식 외줄낚시의 조업이 금지되며, 12해리 안에서 해상냉동 등도 금지하는 등 우리 국적선이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금지시킨 것이 특징이다. 모선식 외줄낚시는 12해리 밖에서 모선이 떠있고, 모선에 있던 카누조업선을 12해리 안에서 조업하도록 하여 카누조업선이 어획한 수산물

을 모선에서 냉동하는 방법이다. 이는 외국 국적선이 12해리 내로 들어와서 조업하지는 않지만 편법으로 12해리 내의 기니 수산자원을 이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해상냉동의 방법은 우리 국적선 중 장기계류 중인 선박이 어항에 정박하고 선박의 냉동장비를 이용하여 카누조업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수매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이는 육상에 동결시설을 갖추고 카누조업선의 수산물을 수매하는 단체의 세력이 매우 크므로 어선을 이용한 해상동결 수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이기도 하다.

한편 투자법상으로는 외국인은 41%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었으나 2010년 법 개정 이후 외국인 현지투자자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합작투자 시 용이한 점은 있다.

3) 기니 어장이용 현황

기니 어장은 사실상 한국 국적의 선박과 육상동결업자(수매업자)에 의해 이용되는 어장이다. 우리나라 국적선사는 기니 코나크리 어장을 중심으로 민어, 서대, 조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니법으로는 12해리 외측 조업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12마일 내측에서 조업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기니의 12해리 내측 연안은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민어 등 한국 수매업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니 어장의 12해리 내외측 모두에서 한국인의 어장 이용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니 연안에서 조업 중인 카누조업선은 약 5천척으로 추정되며 약 38%의 카누조업선과 어구를 한국 수매업자(16개사 협회 설립)가 제공하고 있다. 수매업자들이 제공한 카누조업선 중 약 80%에서 민어, 서대 등을 수매하고 있다. 이들 수매업자(일명 육상동결업자)들은 연간 5천 톤의 민어, 서대 등을 수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¹⁵⁾. 수매업자들이 민어를 수입하는 경우, 조정관세 40%를 물게 되어 있으므로, 인보이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수매업자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자체 자금을 조성하여 기니에 간이병원 설립, 다리 건설, 우물 개발 등의 공공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기니 정부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니의 연안 수매업자들이 연안 카누조업인들에게 무상으로 그물을 제공함에 따라 카누조업인들이 그물이 조금만 파손되어도 바다에 버리고 다시 지급받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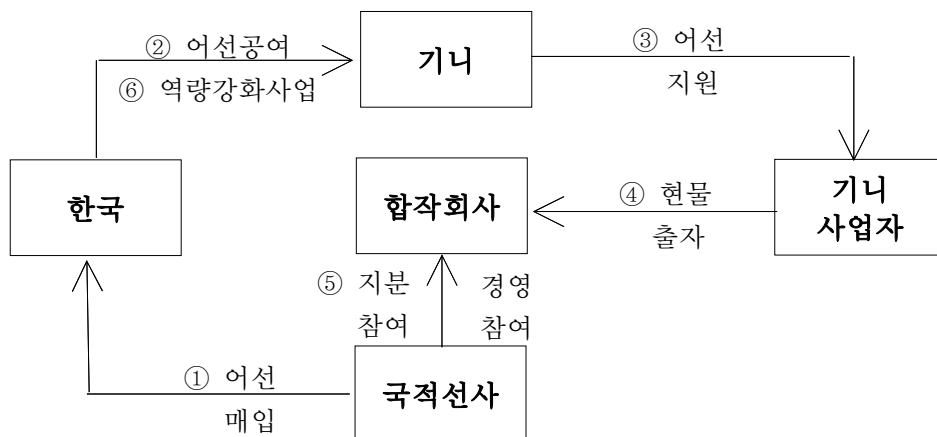
15) 2014년 1월 기니 출장 조사 결과이며, 당시 정부관계자로는 기니 수산부 장관, 차관, 국장 및 해양경비대 국장 등과 면담하였으며, 우리나라 육상동결업자, 국적선사 대리점 등과의 업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을 택하고 있어 페그물이 연안에 적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페어구 수거사업 등을 통한 어장환경 개선 사업의 병행 없이는 수 년 내 어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최대 어장 중 하나인 모리타니아 어장이 무분별한 문어단지로 인해 자원이 급감했던 사례가 있어 기니 어장에서 실질적인 자원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기니 어장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입어 금지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만 연안어장의 자원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정적 합작사업 유도 방안

기니 정부와의 면담조사에서 기니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한 특별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바 있으나 당시 수산부 장관은 부정적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또한 기니 정부에 선박을 공여하고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니 정부는 중고선 공여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선박을 즉각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정부는 기니정부에 어선공여와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국적선사와 기니사업자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2〉 초기 합작회사 설립 개념도

따라서 기니정부의 현안 문제인 연안 고스트피싱 문제를 야기하는 페그물 처리 등 연안자원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신뢰 회복을 한 뒤 단계적 접근 및 합작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인 육상동결업자들의 반대가 있다면 한국의 국적선사들이 기니 연안어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서로 간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페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적선사, 한국인 수매업자, 기니 정부가 공동으로 자원관리공사를 설립하고 한국 정부가 트롤어선을 매입¹⁶⁾하여 자원관리공사에 공여함으로써 페어구 수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기니 연안 어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안자망 등에 따른 남획방지 및 페어구에 따른 어장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장환경 개선노력과 실적을 토대로 신뢰회복을 하고, 공여선박을 확대하여 개도국이 자체적 어선 이용방안 마련시 합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니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단기적으로는 해상 냉동을 위한 선박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자국의 선박을 이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3〉 아프리카 연안국가와의 “패키지딜”을 통한 합작 수행

합작을 위한 조건으로는 기니정부 등 대상 연안 개도국에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¹⁷⁾. 우선 서부아프리카 합작회사의 반입물량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최빈개도국 관세감면 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형 트롤선이 연안조업을 위해 현지 수산업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을 마련

16) 선박매입 후 선박은 개도국 인프라 지원사업에 사용하며, 선박 매입 시 선박에 대한 보험금액 이외에 객관적 중빙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선박 보험금액으로 산정한다.

17) 중국의 민간회사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가나와의 입어를 위한 2013년 합작계약서 사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조업구역 지정 또는 조업 시기를 지정하여 조업하고, 일정 쿼터량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 물량 이상을 일정 금액에 양륙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하여 연안 지역민 생계유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연안 카누조업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연안 조업에 따른 피해 예상 어업인의 선원교육 및 승선 조항을 마련한다.

참고 4. 중국 LOMA社の 가나 합작 계약서(20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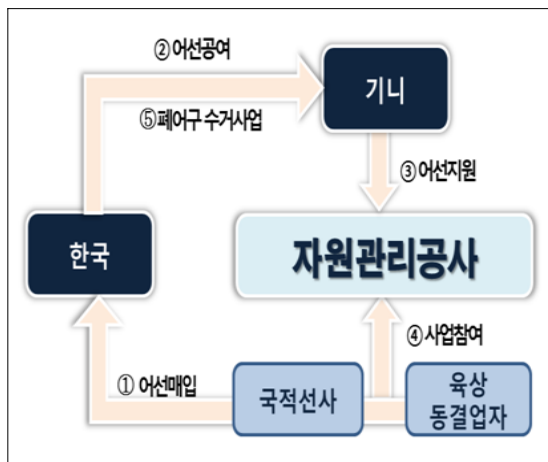
1. LOMA社와 중국은 가나 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협력을 목적으로 합작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2. LOMA社와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트롤선 6척을 받는다.
3. LOMA社는 배의 등록을 책임지고, 선박에 가나의 깃발을 달고 필요한 모든 공급품(디젤유, 윤활유) 등을 가나의 조건으로 살 수 있고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
4. LOMA社는 이 프로젝트에 중국 국적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모든 라이선스와 로열티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주거허가증을 발급한다.
5. LOMA社는 어선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사항을 구비한다.
6. LOMA社는 해안시설을 제공하고 필요기간 동안 위에 언급한 서비스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공한다.
7. 연안에서 잡은 어획물은 모두 자국항에 양륙하는데 동의한다.
8. 중국 측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부담한다.
 - a) 가나 연안에서 6개 트롤선 제공
 - b) 가나 선원을 고용하여 훈련시키고 임금을 지불한다.
 - c) 계약기간동안 가나 내 다른 어떤 회사와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 d) 모든 관련 기록(예. 선박의 어획기록, 준비시간 등)을 제공한다.
 - e)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선장이 요구사항을 보낸다.
9. 중국은 매달 선박 1척당 15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한 지역시장에 양륙할 때 수수료도 지불한다.
10. 식용 가능한 어류를 동의한 가격에 양륙한다.
11. 라이선스 발급 관련 모든 제반 비용은 중국에서 부담한다.
12. 이 계약의 이행 혹은 해석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갈등은 두 당사자들에 의해 잘 해결되거나 중재된다.

자원관리기반(MSY) 합작어업은 신뢰부족으로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국적선사가 조업하는 민어 등은 아프리카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아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 문제점이 있어 합작어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기니어장 등은 국적선사 이외에 한국의 수매업자들이 지급한 자망 등으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연안관리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들 국가와의 연안관리를 통한 신뢰회복 이후에 합작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략은 1단계 자원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개도국 자원관리 기여를 우선하는 신뢰회복 단계, 2단계 개도국 역량강화사업을 결합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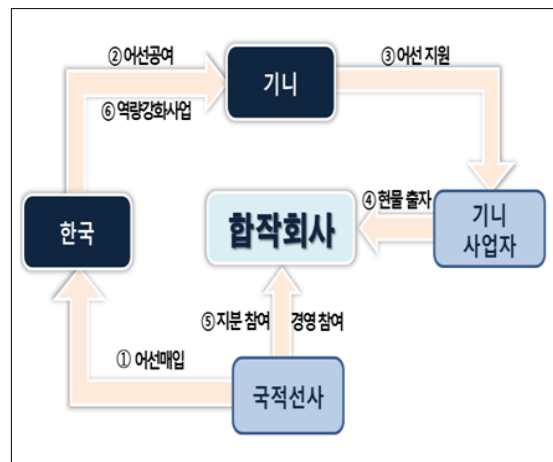
▪ 1단계(신뢰회복)

- 자원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개도국 자원관리 기여



▪ 2단계(합작사업)

- 개도국 역량강화사업을 결합한 합작회사 설립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4〉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략

합작전략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은 현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로 서부아프리카 출어선사들의 자율적 기업결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안국 합작어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 국가별로 3개 회사의 기업결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선박의 매입은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효율성분석 결과에 따라 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1〉 서부아프리카트롤의 선박별 효율성 분석 결과

업종	선박명	해역	효율성	선령
서부 아프리카 트롤 (34척)	해정 1	대서양중동부	0.225	39
	압사리 3	대서양중동부	0.194	43
	해정 3	대서양중동부	0.192	40
	해정 7	대서양중동부	0.191	41
	오시토 89	대서양중동부	0.183	40
	루안다 1	대서양동남부	0.180	39
	루안다 5	대서양동남부	0.179	39
	대성 9	대서양동남부	0.178	40
	메드라	대서양중동부	0.173	40
	풍림 8	대서양중동부	0.170	42
	백양 29	대서양중동부	0.166	39
	백양 37	대서양중동부	0.162	41
	아마폴라 515	대서양중동부	0.160	39
	풍림 7	대서양중동부	0.155	42
	풍림 12	대서양중동부	0.140	45
	오션 5	대서양중동부	0.133	39
	아그네스 9	대서양중동부	0.129	39
	세타 70	대서양중동부	0.128	12
	금웅 103	대서양중동부	0.114	44
	태웅 608	대서양중동부	0.112	41
	오로라 6	대서양중동부	0.110	43
	금명 2	대서양중동부	0.109	46
	금웅 102	대서양중동부	0.107	45
	금웅 106	대서양중동부	0.106	40
	서현 101	대서양중동부	0.104	38
	투스타	대서양중동부	0.103	45
	금웅 109	대서양중동부	0.100	40
	식스스타	대서양중동부	0.095	46
	금웅 101	대서양중동부	0.093	41
	오션 2	대서양중동부	0.080	37
	파이버스타	대서양중동부	0.071	42
	오션 3	대서양중동부	0.065	39
	나인스타	대서양중동부	0.035	39
	어드벤처	대서양동남부	0.026	31

자료: 필자 작성

3. 중층트롤로의 업종 전환

현재 대서양트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인 중층트롤로의 업종 전환은 연안 12마일 외측 조업이 가능하여 IUU어업의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유도가 필요한 대안이다. 중층트롤은 12해리 밖 먼 바다에서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등을 조업하는 어업형태로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들은 아프리카 판매용 또는 유럽 판매용으로 수출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층트롤로의 전환은 서아프리카 대서양 어장을 수급정책의 대상에서 수출정책의 대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과 개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로 인해 업계의 희망 척수가 2척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UU어업 규제로 저층트롤이 점차 어려워지면 중층트롤로의 업종 변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단, 중층트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어장개척, 어선설비 및 어법 등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박개조 금액은 그물 5천만 원, 급내시설 3억 원, 장비 1억 원, 트롤원치 3억 원 등이 소요되어 척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최소 400톤 이상만 전환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층트롤은 저층트롤의 경우와 달리 저가의 수산물을 대량 어획하여 수지를 맞추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작은 톤수의 선박은 어창의 규모가 크지 않아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층트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반선 확보가 필수적이며, 목표어종의 변경으로 판로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소진 판매 물량에 대비하여 어분 공장을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재판매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서부아프리카 합작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적지 및 조사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아프리카 현지 조사가 되지 않았던 연구 시작 시점에는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합작만 하면 현재와 같이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자적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현지 조사를 통해서 현재 EU의 강력한 IUU통제법 하에서 그리고 환경정의재단 등 NGO 단체의 감시가 강화된 환경 하에서는 아프리카 연안 12해리 내에서 연안 카누조업선과의 마찰이 가능한 조업,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수급에 위협이 되는 조업행태는 아프리카 현지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정부의 합법적인 라이선스가 합작회사에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우리나라 국적선의 합작전환 등의 노력이 아프리카 연안국, EU, 환경단체들과의 신뢰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서양 트롤업계가 편의치적 등의 극단적 방법으로 우리나라 통제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서양 트롤업계의 대책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 연구는 서부아프리카 합작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적지 조사에서 서부아프리카 대서양트롤업계의 대책 수립 연구로 초점을 바꾸게 되었다.

대서양 트롤업계는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에서의 합작을 희망한바 있다. 그러나 대서양 트롤업계가 희망하는 합작방법은 상업적 대형트롤선으로 12해리 이내에서 조업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연안국의 수산업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해당 연안국에서 특별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원관리, 연안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 기여, 카누조업선과의 마찰방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동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EU, NGO 등과의 사전 협의가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감척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면, 감척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양어업도 자원조사 후 적정 어선세력의 산출을 통해 자원관리의 목적으로 감척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하나, 실제로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서 감척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감척 관련법의 명분과 맞지 않다. 또한 현재 국내법상 감척프로그램으로는 평년 수익이 적자이고 어선의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선박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보인다.

중층트롤로의 전환은 12해리 밖에서 조업이 가능하므로 IUU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조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수요가 적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만 가능하다는 점, 이들 선박을 중층조업에 맞도록 개조해야 하며 제반 비용이 따른다는 점, 저가 수산물의 대량 어획으로 수지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운반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 판매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전환을 희망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종적으로 합작이 가능한 국가와의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자원조사, 어업협정, 선원교육, 식량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는 “패키지딜”을 통해 단계적 합작 수행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 해역에서의 조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면 최빈개도국 관세감면 조치와 위생협정을 병행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기니 정부 내부자료

기니 수산업법(1995. 6. 12)

기니비사우 정부 내부자료

시에라리온 정부 내부자료

시에라리온 수산업법(1988.4.29)

세네갈 수산업법(1998.4.14, 1998.6.10)

앙골라 정부 내부자료

한국무역공사, “미개척 유망시장을 간다. 앙골라편”, 2008.

Alkaly Doumbouya, “Guinean Fisheries: Case Study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CNSHB. 2013.

CTA, "L'avenir des relations peche ACP-UE", 2006.

KMI, The 2010 Fisheries Conference in Cape Town, Current Issues of Korean &
African Fisheries and Cooperative Measures, 2010.

KMI, 2011 KORAFF Angola Symposium, Promoting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2011.

Salieu Sankoh and Kadijatu Jallo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Fisheries
Sector", KORAFF, 2013.

UN ECA, “Economic Report on Africa 2012”

Vlad M. Kaczynski, David L. Fluharty, "European policies in West Africa: who
benefits from fisheries agreements?", Marine Policy 26(2002) 75-93

인터넷 자료

EU 수산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dgs/maritimeaffairs_fisheries/index_en.htm)

FAO 홈페이지 (<http://fao.org>)

FAO Fishstat plus 통계 프로그램

World Bank,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0.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wdi-2010>)

World Bank, Doing Business Webpage. (<http://www.doingbusiness.org/>)

부 록

1. 2014 기니공화국 어업법

부 록

1. 2014 기니공화국 어업법

기니공화국 농수산부 장관은

법령 No A/2014/019 MPA/CAB/SGG

2014년 어업개발과 관리계획승인서

를 다음의 법에 의거하여 포고한다;

1982년 12월 10일 채택하여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 해양법에 의거;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조업선들에 대한 국제 자원 보호와 관리 규정에 의거;

1982년 12월 10일자 EEZ내에서 서식하는 어족 및 장거리 회유성 어족 자원보호와 관리에 관해 기니공화국도 비준한 유엔 협약상의 규정들의 적용에 의거;

1995년 10월 31일 28회 FAO 총회 결론 4/95에 의한 책임 있는 조업 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15일자 법률 L/95/13/CTRN 수산업법 29조에 의거;

1995년 6월 12일자 법률 L/95/23/CTRN 해양항만법에 의거;

1997년 10월 16일자 법령 D/97/227/PRG/SGC 수산업법 발효 총칙에 의거;

2011년 2월 25일자 법령 D/2011/042/PRG/SGG 농수산부조직법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6/PRG/SGG 위성과 항공에 의한 어업 감시기구 설립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7/PRG/SGG 어선 위성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무화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8/PRG/SGG 어획물의 전재와 하역에 적용할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7일자 법령 D/016/PRG/SGG 불법조업에 관한 범칙금 개정에 의거;

제1조: 2014년도 어업개발과 관리계획(이후 계획이라 부른다)이 승인되었다.

제2조: 계획은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는 해양 생물자원의 보다 나은 관리와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기니 공화국 관할의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제3조: 계획은 유효한 어업허가를 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에 적용된다.

제4조: 어업 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모든 어선은 위성 추적 장치를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니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내에서 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선박은 항시 선명, 식별 부호를 현행법상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한다.

제6조: 기니공화국 국적 어선으로 공해상이나 또는 제3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 전제 허가서 발급 이전이나 어획물 하역 이전에 CNSP(어업 감시국)은 IUU 어획물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법한 어획물 인가를 적절한 조사 후에 관계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농 수산부 검사국장, 수산국장, 어업감시국장, 농수산물 위생검사국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각자 본 법령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본 법령은 이전 법령을 폐기하고 기니공화국의 관보에 등록되고 게재될 것이다.

코나크리 2014년 1월 20일

무사꼰데 (서명)

2014년 어업 개발과 관리계획

I. 적용범위

본 어업 개발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후 계획이라고 부른다)은 아래에 지정한 어업 제한구역내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된다.

기니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제한 구역 바깥쪽의 해역은 다음의 경위도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북측

Cajet 계선과 서경 15°06'30"선과 교차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 포인트를 지나고:

A- 10°50'00"N	15°09'00"W
B- 10°40'00"N	15°20'30"W
C- 10°40'00"N	15°34'15"W

그리고 C포인트로부터 모든 자오선을 236° (사향방위)로 횡단하여 바깥쪽 해양 수역 까지 기니공화국과 기니비사우 간 합의한 국경선을 긋는다.

남측

위도 9°03'18"N 을 따라 썰물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니 수역의 산업용 저인망 어업의 경계선은 12해리와 20미터 등심선으로 규정한다. 2014년도 기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0°40'00"N	9- 09°44'00"N
15°34'15"W	14°21'00"W
2- 10°09'00"N	10- 09°41'08"N
15°34'30"W	14°14'00"W
3- 10°06'00"N	11- 09°30'00"N
15°22'40"W	14°04'40"W

4- 10°01'58"N	12- 09°28'00"N
15°12'58"W	14°02'30"W
5- 10°04'58"N	13- 09°22'00"N
14°45'59"W	13°58'15"W
6- 09°59'58"N	14- 09°15'30"N
14°36'40"W	13°53'55"W
7- 09°53'58"N	15- 09°09'58"N
14°59'57"W	13°43'00"W
8- 09°46'06"N	16- 09°03'00"N
14°23'30"W	13°37'15"W

계획은 자원의 상태, 생태계와 이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직접평가

저서 어족자원(경골어류 및 두족류 poissons et cephalopodes)에 대한 데이터는 지난 2012년 1월과 5월에 두 번의 보수라 국립수산물연구소(CNSHB)에 의해 행하여진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다. 중층 어류(pelagique)자원의 데이터는 2011년 10월 Fridtjofth의 시험 조업 평가 결과이다 (카나리 해류의 대 해양 생태계 프로젝트) (CCLME)

이 연구는 다음의 요소들로 연구되어졌다

- 어획되는 어종의 분류
- 그 어종의 어군 밀도 및 통계
- 부존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
- 개발 잠재력

이 연구기간중 얻어진 저서어족 자원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에 표시되어있다

〈표 1〉 어종별 어군 밀도

No	그룹	어군밀도 2012(kg/30분)
1	poissons(경골어류)	245.2
2	crustaces(갑각류)	3.8
3	cephalopodes(두족류)	3.8
4	gasteropodes(복족류)	7.1

2011년 6월 N/R Fridtjoff Nansen호에 의해 실시된 음향 측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sardinella, Chinchard, carangides를 포함한 300,000 톤의 체형이 작은 중층 어종 부존자원이 있다

2. 간접평가

2.1 중층 어류

2009년 중 동부 대서양 어업 위원회(COPACE)에서 실시한 그룹 조사에 의한 결과 연안 중층 어류중 sardinella spp는 충분히 어획되었고, Ethmalosa fimbriata는 남획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2 저서어족 자원

2011년 11월 가나 아크라에서 실시한 COPACE 남부해역의 저서어족에 관한 그룹 조사 결과 아래사항을 지적하였다.

- bars 종류 (Pseudotolithus spp)는 남획되었다
- dorades 종류(Sparides)는 적절하게 어획되었다.
- grondeurs (Pomadasys spp)는 충분히 어획되었다.
- petits capitans(Galeoides decadactylus)는 충분히 어획되었다.
- soles(Cynoglossus)와 machoirons(Arius spp)는 적절히 어획되었다.

30해리 바깥쪽의 새우(Parapenaeus longirostris)와 두족류의 부존자원은 평가하지 않았다.

2.3 어종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

2011년과 2012년 산업용 어선에 승선한 오피서버들의 믿을만한 보고서에 의하면, 어종 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는 아래표와 같다

〈표 2〉 어종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

어종	일일생산고(톤)
중층어족	24
저서어족	4
두족류	1
새우	0.8

II. 개발규정

II-1 목적

개발목적은 :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니 해안의 어업 자원을 보존
- 남획을 방해하거나 중지
- 책임있는 어업을 증진
- 현 세대 및 차세대를 위한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
- 국경을 넘나드는 어족자원(stock chevauchant), 장거리 회유성 어족 및 공해상 어족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지방간, 지역간 및 국제적인 협력증진
- 해안이나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호
-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의 보호
- 고갈된 자원의 재복원
- 어업 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국제 조직 내에서 채택된 규정과 쌍무간 조약의 이행

II-2 기술적인 조항

2014년도에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산업용 어업

어업 허가를 발급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국제 톤수 증명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어업 허가 발급조건으로 위성 위치 추적장치를 항시 작동하여야한다
 소가 끄는 저인망이나 물의 흐름을 막는 선망은 금지시키나 참치 선망은 제외한다.
 수매선의 활동은 금지한다.

총톤수가 하기보다 큰 선박은 허가발급이 금지된다

- 저서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총톤수 800톤
- 중층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총톤수 2500톤, 참치어선은 제외

기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내에서의 공모선의 조업 금지

기니 국적선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공해 상에서의 조업 금지

어업 허가를 가진 모든 선박에 옵서버 및 기니인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승선하여야 한다.

어업 허가를 가진 모든 선박에 옵서버 및 기니인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승선하여야 하며 조업지에서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b) 재래식 어업

다음과 같은 어구의 사용금지:

- 모노 필라멘트 망지 및 멀티 필라멘트 나이론 망지
- 해변가 선망
- 화약류 또는 독극물 혹은 향정신제

재래식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어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III. 관리규정

본 계획은 COPACE에 의해 행해진 간접 평가와 함께 2012년 CNSHB에 의해 행해진 저서어족 자원 및 2011년 Fridtjoff Nansen호에 의해 행해진 중층 어족자원 직접 평가에 바탕을 두었다.

보존을 위한 예방 규정이지만 어업자원의 보존 관리, 해양 생태계와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양 생물자원의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규정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2014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2013년도 어획 쿼터 배당은 줄어든다.
- 기선으로부터 30해리 이내의 새우 어획은 금지한다.
- 기니 국적선은 기니 수역은 물론 제3국의 수역이나 공해에서도 적용된다.
- 모든 어종의 치어나 어린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 (재래식 어업 및 산업용 어업)
- 기선에서 5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2개월 (7-8월)간의 금어기를 설정한다.

이 규정들은 산업용 및 준산업용 어선에 적용된다.

아래 규정들도 함께 채택되었다.

- 이상적인 어업을 위한 어업에 관한 정보제공의 서비스능력을 향상 시킨다.
- 조업 구역의 감시 강화와 재래식 어업에도 감시를 확대한다.
- 시스템적인 지시와 만일의 경우, 모든 불법 조업에 대한 제재를 공식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후 감시 대상이나 나포시에 검사 보고서의 자료에 쓰인다.
- 농수산부소속의 경계 구역이나 특성 등의 확인을 위한 직무 담당 부서의 설립
- 공동 관리 자문위원회 의한 어업 자원 공동 관리
- 새로운 보호 해역의 설정
- 재래식 어업용 카누 숫자 확인 및 등록
- IUU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서의 작성

2013년도 개발 잠재력의 적정수준 산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저서어족과 중층어족의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용 및 재래식어업으로 어획할 수 있는 잠재량은 197,500톤으로 추정된다.

〈표 3〉 2013년 잠재어획량

어종	잠재력(톤)
저서어족	33,000
중층어족	150,000
두족류	10,000
새우	4,500
합계	197,500

해안이나 해양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보호하고 어업자원의 보존을 확신하기 위하여, 2013년도 전체 잠재 어획량의 32.5%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조업 년도에는 상기 잠재 어획량의 67.5%만 배당한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상업용어업의 데이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자원들의 상태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여 예방적 적용으로 2014년도에는 전 자원들에 일률적으로 20%의 감소를 시행한다.(하기 표 참조)

〈표 4〉 2014년 잠재 어획량

어종	2013		2014	
	잠재 어획량	계획잠재어획량	잠재어획량	계획잠재어획량
경연끌어류	33,000	19,540	20%	15,632
중층어족	150,000	100,248	20%	80,198,4
두족류	10,000	9,684	20%	7,747,2
새우	4,500	3,940	20%	3,152
합계	197,500	133,412		106,729,6

IV. 쿼터대금

1. 쿼터와 혼획 어종의 허가된 비율

2014년 조업년도의 쿼터와 허가된 혼획어종 비율은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다.

〈표 5〉 쿼터와 허가된 혼획어종 비율

	저서어족	두족류	새우	중층어족	합계
저서어족 혼획	12,800 -	1,152 9%	1,152 9%	128 1%	15,236 -
저서어족 혼획	2,240 35%	6,400 -	640 10%	64 1%	9,344 -
새우 혼획	192 15%	115,2 9%	1,280 -	6.4 0.50%	1,593.6 -
중층어족 혼획	400 0.50%	80 0.10%	80 0.10%	80,000 -	80,560 -
합 계	15,632	7,747.2	3,152	80,198.4	106,729.6

2. 2014년도 총 톤수 배당

2014년도에 허가된 어종별 선박 총 톤수 배당은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다.

〈표 6〉 2013년도 조업 가능성

항목	저서어족	두족류	새우	중층어족
최대총톤수	250	150	176	2,198
척수	16	32	7	9
2014년 승인 총 쿼터(톤수)	4,000	4,800	1,232	19,370

주의: 예방적으로 적절한 잠재 어획량의 감소와 조업 가능 총 톤수의 25%의 감축에 연계하여 적용되었다.

2014년 조업연도에 효과적으로 승인된 조업 가능 척 수는 아래 <표 7>에 표시되어 있다.

〈표 7〉 2014년도 효과적인 조업 가능성

항목	저서어족	두족류	새우	중층어족
승인 쿼터	3,000	3,600	924	14,527
평균총톤수	250	150	176	2,198
척수	12	24	5	6

주의: 중층어족에 관해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척수가 매 3개월에 10척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본 계획에 정해진 가능한 어업을 고려한 것이다.

V. 혼획어종

허가된 혼획어종 비율:

- 저서어족대상 어선
 - 9% 갑각류
 - 9% 두족류
 - 1% 중층어족
- 두족류 대상 어선
 - 35% 저서어족
 - 10% 갑각류
 - 1% 중층어족
- 새우 대상 어선
 - 15% 저서어족
 - 9% 두족류
 - 0,5% 중층 어족
- 중층 어족 대상 어선
 - 0.5% 저서어족
 - 0.1% 두족류
 - 0.1% 새우

위에 표시된 비율을 초과하여 혼획 어종을 포획하는 모든 선박은 수산업법상 해당조항의 위반 행위이다

VI. 조업 구역

본 계획을 위하여 조업 구역은 기선으로부터 정해진다.

어종별 허가된 조업 구역은 다음과 같다

- 12해리¹⁸⁾까지, 재래식 어업용 선박(동력이 없거나 출력이 60마력 이하의 동력선)
- 12해리 바깥해역, 개량식 재래식 어업용 선박(기관 출력이 60마력이상)
- 12해리 바깥 및 수심 20미터 이상, 저서어족이나 두족류 대상 선박
- 12해리 바깥이라도 수심이 20미터 미만이면 저인망 조업 금지
- 30해리 바깥해역, 새우대상 선박
- 50해리 바깥해역, 중층 어족 대상 선박과 참치 대상 선박

VII. 해상 보호 구역

구역은 이후 AMP (Aires Marines Protegees)로 부르며 하기와 같이 경위도로 표시한다, 2013년 2월 20일자 법령 D/2013/037/PRG/SGG와 D/2013/038/PRG/SGG에 의해 국가 관리 하에 둔다.

104,680ha면적의 Tristao 지역 국가 보존 지역의 경계선은 하기 기점들에 의해 정해진다.

기점	위도	경도	기점	위도	경도
1	10°43 ' 49 "	15°05 ' 56 "	14	10°58 ' 10 "	14°45 ' 09 "
2	10°47 ' 60 "	15°09 ' 00 "	15	10°57 ' 39 "	14°45 ' 54 "
3	10°54 ' 35 "	15°07 ' 24 "	16	10°56 ' 44 "	14°47 ' 00 "
4	10°57 ' 35 "	15°00 ' 21 "	17	10°55 ' 48 "	14°48 ' 52 "
5	10°58 ' 08 "	14°58 ' 44 "	18	10°53 ' 01 "	14°48 ' 36 "
6	10°57 ' 59 "	10°56 ' 06 "	19	10°51 ' 32 "	14°48 ' 13 "
7	10°56 ' 34 "	14°53 ' 42 "	20	10°49 ' 19 "	14°48 ' 21 "
8	10°57 ' 44 "	14°53 ' 47 "	21	10°49 ' 44 "	14°45 ' 55 "
9	10°56 ' 01 "	14°47 ' 36 "	22	10°47 ' 46 "	14°45 ' 01 "
10	10°56 ' 23 "	14°48 ' 36 "	23	10°45 ' 40 "	14°46 ' 42 "
11	11°00 ' 29 "	14°48 ' 30 "	24	10°43 ' 48 "	14°46 ' 49 "
12	10°58 ' 35 "	14°47 ' 53 "	25	10°41 ' 14 "	15°00 ' 43 "
13	10°58 ' 32 "	14°46 ' 23 "			

Alcatraz 전체 보존지역은 Alcatraz섬, Naufrage섬과 3해리 해역피(5,566km²)를 포함하며 경계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18) 해리라 함은 국제 해상 해리로 1,852 미터에 해당한다.

기점	위도	경도	기점	위도	경도
A	10°37 ' 51 "	15°20 ' 36 "	G	10°36 ' 50 "	15°22 ' 19 "
B	10°37 ' 56 "	15°21 ' 11 "	H	10°36 ' 26 "	15°22 ' 02 "
C	10°37 ' 52 "	15°21 ' 17 "	I	10°36 ' 41 "	15°21 ' 37 "
D	10°37 ' 47 "	15°21 ' 38 "	J	10°36 ' 51 "	15°21 ' 13 "
E	10°37 ' 44 "	15°21 ' 51 "	K	10°37 ' 11 "	15°20 ' 47 "
F	10°37 ' 23 "	15°22 ' 07 "	L	10°37 ' 33 "	15°20 ' 31 "

중심해역에 인접하거나 3해리 바깥에서 접속해역 혹은 주변 해역과 겹치는 해역 경계선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기점	위도	경도	기점	위도	경도
1	10°38 ' 38 "	15°20 ' 37 "	5	10°35 ' 38 "	15°21 ' 49 "
2	10°38 ' 51 "	15°21 ' 59 "	6	10°36 ' 01 "	15°20 ' 16 "
3	10°37 ' 58 "	15°22 ' 53 "	7	10°37 ' 03 "	15°19 ' 46 "
4	10°36 ' 42 "	15°22 ' 59 "	8	10°38 ' 06 "	15°19 ' 43 "

VIII. 어망의 망목

기니국도 비준한 CSRP 회원국의 경제 수역내의 어업 자원 개발에의 접근 최저의 조건을 정하는 협약에 의해, 산업용 어업의 허가된 망목은:

- 70mm 저서어족 대상 저인망의 끝자루(뽀친 길이)
- 70mm 두족류 대상 저인망의 끝자루(뽀친 길이)
- 40mm 새우대상 저인망의 끝자루 (뽀친길이)

재래식어업에 허가된 망목은:

- 25mm (안뽀친길이) 중층어족 대상 재래식 어업
- 30mm (안뽀친길이) 저서어족 대상 재래식 어업
- 35mm (안뽀친길이) 대륙식 어업

끝자루 보호용 망지의 망목은 상기 해당 망목의 3배나 그이하가 되어야 한다.

IX. 기니 해안의 어업 자원への 접근 조건

어업 자원への 접근은 기니 선박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9.1 산업용 어업

- 선박등록을 하기 위한 양식에 의거하여 수산장관에게 어업 허가를 신청한다.
- 허가 신청한 선박은 CNSP 검사관을 선박 검사 및 어구 검사의 목적으로 승선시키기 위해 부두에 정박한다.
- 수산물 위생 검사소(ONSPA)검사원의 선박 위생 검사 실시
-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어선들은 사전 선박 등록을 해야 한다.
- 수산국(DNPM)에 선박 국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래식 어업용 어선들의 선적지를 관청에 등록한다.

X. 어업 허가비

10.1 2014년 산업용 어업에 적용되는 허가비

2014년에 산업용 어선에 적용되는 허가비는 USD/년/톤당으로 하기 표에 정해져 있다.

〈표 8〉 저인망 냉동 어선(US\$/톤당/년)

선박국적상태	중층어족	두족류	새우	저서어족
기니 국적선	280	350	430	315
기니기지 외국적어선	500	350	430	315
외국적어선	500	350	430	315

주의: 어업 조사 기금 조성을 위한 적절한 입어로 인상으로, 이는 산업용 어선은 매3개월에 USD 2,000.000을 받 산업용 어선은 USD 1,000.000을 선지불 한다.

〈표 9〉 산업용 냉장 저인망 어선

선박 국적상태	입어로
기니 국적선	145\$us/톤당/년간
기니기지 외국적 어선	145\$us/톤당/년간
외국적 어선	145\$us/톤당/년간

<표 10> 저인망 이외의 산업용 및 반 산업용 어선

어선 종류	입어료
참치 선망	30,000\$US/년간/척당
참치 채낚기	24,000\$US/년간/척당
저서어족 대상 준산업용 저인망	15,000\$US/년간/척당
통발 어선	5,000\$US/년간/척당

주의: 선망 입어료는 1년 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는 입어 허가 유효기간에 비례하여 나누어 낼 수 없다.

<표 8>의 입어료 280불/톤당은 어획물을 전량 기니에 하역하는 기니 국적의 중층 어선에 적용한다.

10.2 재래식 어업에 적용하는 허가비

<표 11> 재래식 어업에 종사하는 출력 15마력에서 40마력까지의 동력 어선

국적	대상 어종	입어료
국적선	둘러치거나 혹은 떠다니는 망(funfunyi)	50,000GNF/년간
	해저에 둘러치는 망(glboya)	100,000/GNF/년간
	바라쿠다나 까뻬탄대상 해저에 까는 망(legotine)	200,000/GNF/년간
	작은 중층 어족 대상 둘러싸는 망	150,000/GNF/년간
	돌추를 사용하여 까는 망(Flimbote)	250,000/GNF/년간
	sardinella대상 둘러서 까는 망	250,000/GNF/년간
	돌추 사용 낚시(모선식)	250,000/GNF/년간
	dorade,machoiron대상 외줄낚시(dalaban)	200,000/GNF/년간
외국적선	둘러치거나 혹은 떠다니는 망(funfunyi)	80USD/년간
	해저에 둘러치는 망(glboya)	400USD/년간
	바라쿠다나 까뻬탄 대상 해저에 까는 망(legotine)	300USD/년간
	작은 중층어족대상 둘러싸는 망	120USD/년간
	돌추를 사용하여 까는 망(Flimbote)	500USD/년간
	sardinella대상 둘러서 까는 망	400USD/년간
	dorade,machoiron대상 외줄낚시(dalaban)	150USD/년간
	돌추 사용 낚시(모선식)	200USD/년간

〈표 12〉 출력 40마력에서 250마력까지의 선외기 동력선으로 개량채래식어업어선

국적	대상어종	입어료
국적선	sardinella 대상 까는 망	2,250,000GNF/년간
	작은 중층 어족 대상 둘러치는 망	2,000,000GNF/년간
	dorade,machoiron대상 외줄낚기	2,150,000GNF/년간
	작은 중층 어족 대상 저인망	17,000,000GNF/년간
외국적선	sardinella 대상 까는 망	1,200USD/년간
	작은 중층 어족 대상 둘러치는 망	1,000USD/년간
	dorade,machoiron대상 외줄낚기	1,500USD/년간
	작은 중층 어족 대상 저인망	3,000USD/년간

주의: 반 산업용 어선이란 저서어족대상 총톤수 75톤 미만 전장이 25미터 미만의 빙장선으로 7시간 미만의 연료 보유량을 가지고 출력 250마력 미만의 내기선 동력 어선을 말한다.

〈표 13〉 어업 감시 기금

어선 종류	USD
반 산업용 저서어족 대상 저인망 어선	4,500
산업용 빙장 어선	5,500
산업용 냉동 어선	7,500
중층 냉동 어선	8,500

〈표 14〉 2014년 기타 납부금

명칭	납부금
옵서버 프로그램	400\$US/매월
어업 자원 관리활동	1.000\$US/년간/척당
어선 등록	25\$US/년간/척당
위성 서비스	150\$US/신호기/매월
어업 통계(ONP)	600\$US/년간/척당
기술및 위생 승인(ONSPA)	5,000,000FG/년간/척당

XII. 입어료 지불 방식

상기 표에 표시된 금액은 미화나 당일 환율의 기니 프랑으로 지불할 수 있다. 참치어선의 입어료는 전체 금액을 일시에 지불한다.

XIII. 어획 보고

기니 수역 내에 어업 허가를 가진 모든 산업용 어선의 선장들은 선내에 당일의 어획량, 조업지 출입보고 등의 자료를 기록한 조업 일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선장에 의해 작성된 조업일지의 요약을 전자메일주소: cellulesgrhgn@yahoo.fr로 발송한다.

항차 종료 시까지 선장으로부터의 이 보고서가 CNSP에 다 접수되지 않을 시는 해당 선박에 승선한 옵서버에 의해 제출된다.

XIV. 어획물의 전재 및 하역

어획물 전재 및 하역은 2014년 1월 7일자 법령 no. 008/PRG/SGG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XV. 기타 법적 규제 및 규정

1. 허가 발급조건

현행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a. 항해 허가증 제출
- b. 모든 선박은 작동 가능한 위성 위치 추적 장치(ARGOS 장비)를 갖추고 항시 작동
- c. 허가를 신청한 선박은 코나크리 항이나 묘박지에서 사전 기술 검사 및 위생검사
- d. 선박 제원 검사를 위하여 톤수 증명 원본 제출
- e. 부록2에 기재된 대로 선박 표기 의무.
- f. 코나크리 항구나 묘박지에서 기술 검사를 받은 선박의 사진을 CNSP에 송부
- g. 새로운 수산 사업자들의 수산당국에 사전 등록
- h. 입어로 지불은 어업 종류, 선박 총톤수 및 어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 I. 어업 감시 기금과 자원 개발 기금의 지불
- j. 어업 통계 기금(ONP) 지불
- k. 옵서버 프로그램과 어업 자원 관리에 관한 기금 지불
- l. 입어료는 월별 기준으로 최소 허가기간은 3개월
- m. 경영 중인 수산 회사의 연간 회계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각종세금납부확인서 제출

- n. 기술 및 처리 보존 설비의 위생 승인서
 - o .오퍼서 및 최소한 2명의 기니인 선원 승선
 - p. 선박 등록 관청에 어선 등록
2. 모든 선박은 연중 어업 종류를 바꿀 때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3. 오퍼서의 일일통보
- 선박의 선장은 오퍼서가 매일 선박의 위치나 항해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게 통신기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4. 어획물 해상 투기
-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물투기는 일일 어획량의 10%이다.
5. 어선의 출입 신고
- 모든 기니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내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산업용 어선의 선장은 라디오나 혹은 선박내의 다른 어떤 통신수단에 의해 기니 해역을 나가고 들어올 때의 위치의 경위도를 CNSP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연골 어류관리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가오리 및 상어)
- 상어 어획은 금지한다. 어쩔 수 없이 어획된 경우는 보관하여 지느리미를 자름이 없이 전체를 하역하여야한다.

XV. 조업연도 기간

본 어업 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계시 12시까지이다.